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상아 예산분석관
김유진 예산분석관

지원 | 김리라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I. 예산안 개요 / 5

- 1. 현 황 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

II. 주요 사업 분석 / 16

〈일반회계〉

- 1.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의 실소요를 반영한 세출예산 조정 필요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내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 필요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 국립대학육성사업 특성화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편성 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27
- 4.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추진체계 안정화 및 재정지원 방식 개선 필요 32



CONTENTS

〈미래대응기금〉

5.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참여 확대 및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체계 정비 필요	39
5-1.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참여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필요	39
5-2.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관리 유의 및 지원체계 합리화 필요	44
6.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의 사업설계 및 지원방식 보완 필요	49
7.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 점검 및 운영·성과관리 강화 필요	54
8.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의 중장기 재정부담 검토 및 지역인재 유치효과 점검 필요	61
9.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의 법적 기반 및 중기 투자·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69
10.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시 필요 분야 집중 지원 및 타 인프라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75

[국가교육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85	
1. 현 황	8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8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예산안 개요 / 91

- 1. 현 황 9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9

II. 주요 사업 분석 / 104

〈일반회계〉

-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준비 및 지원단 설치예산 반영 필요 104
- 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적극적인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110
- 3.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사업 재원 확보 필요 114
- 4.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수익률 제고 필요 119



CONTENTS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메가관광권 조성: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등 125
- 6.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32
- 7.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사업: 전년도 이월이 반복되는바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37

〈미래대응기금〉

- 8.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기존 실적을 고려해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등 144
- 9.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사업: 기존 관광사업 융자지원 사업과 차별성
확보 필요 등 153

〈국민체육진흥기금〉

-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158

[국가유산청]

I. 예산안 개요 / 165

- 1. 현 황 16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0

II. 주요 사업 분석 / 172

〈일반회계〉

- 1.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의 분리편성 필요 172
- 2.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179
- 3.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 예산 편성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등 사업 개선 필요 187
- 4.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 예측 필요 등 193

교육위원회



교육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및 3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미래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7조 5,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2억원(4.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29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661억원, 영유아특별회계 167억원, 사학진흥기금 2,14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조 8,053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교육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07,269	541,370	541,370	515,846	△25,524	△4.7
- 일반회계	124,730	94,683	94,683	129,121	34,438	36.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62	7,314	7,314	3,879	△3,435	△47.0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54,509	430,650	430,650	366,116	△64,534	△15.0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7,068	-	-	-	-	-
- 영유아특별회계 ²⁾	-	8,723	8,723	16,730	8,007	91.8
기 금	65,683	6,672,773	6,672,773	7,019,466	346,693	5.2
- 사학진흥기금	2,012	196,982	196,982	214,189	17,207	8.7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3,671	6,475,791	6,475,791	6,805,277	329,486	5.1
합 계	472,952	7,214,143	7,214,143	7,535,312	321,169	4.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 2026년도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17조 5,96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조 4,026억원(5.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0조 4,32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1,228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4조 3,139억원, 영유아특별회계 9조 4,422억원, 사학진흥기금 2,18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조 1,351억원, 미래대응기금 4조 9,315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교육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6,394,544	99,389,845	104,202,353	105,311,480	1,109,127	1.1
- 일반회계	77,466,630	73,470,942	78,241,579	80,432,538	2,190,959	2.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4,147	233,255	233,255	1,122,843	889,588	381.4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0,865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5,382,901	16,390,859	16,431,159	14,313,925	△2,117,234	△12.9
- 영유아특별회계	-	9,294,789	9,296,360	9,442,174	145,814	1.6
기 금	6,881,719	6,970,904	6,991,296	12,284,769	5,293,473	75.7
- 사학진흥기금	378,722	258,632	259,204	218,151	△41,053	△15.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502,997	6,712,272	6,732,092	7,135,105	403,013	6.0
- 미래대응기금	-	-	-	4,931,513	4,931,513	순증
합 계	103,276,262	106,360,749	111,193,649	117,596,249	6,402,600	5.8

주: 1)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교육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4조 2,5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10억원(△9.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7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4조 6,499억원, 영유아특별회계 9조 4,422억원이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4,627	130,719	130,719	157,640	26,921	2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62	7,314	7,314	3,879	△3,435	△47.0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6,307,015	17,339,932	17,380,232	14,649,914	△2730,318	△15.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57,757	-	-	-	-	-
영유아특별회계 ²⁾	-	9,294,789	9,296,360	9,442,174	145,814	1.6
합 계	19,740,362	26,772,754	26,814,625	24,253,607	△2,561,018	△9.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2026년도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29조 9,54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5,204억원(△1.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4조 8,49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1,228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4조 5,400억원, 영유아특별회계 9조 4,422억원이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7,666,292	100,445,001	105,257,509	104,849,731	△407,778	△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4,147	233,255	233,255	1,122,843	889,588	381.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0,865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5,633,923	16,647,652	16,687,952	14,539,969	△2,147,983	△12.9
영유아특별회계	-	9,294,789	9,296,360	9,442,174	145,814	1.6
합 계	116,845,227	126,620,697	131,475,076	129,954,717	△1,520,359	△1.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미래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조 1,419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5조 4,918억원(37.5%)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사학진흥기금 3,18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4조 8,923억원, 미래대응기금 4조 9,315억원이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학진흥기금	597,196	411,077	411,077	318,163	△92,914	△2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838,360	14,239,057	14,239,057	14,892,261	653,204	4.6
미래대응기금		-	-	4,931,513	4,931,513	순증
합 계	12,435,556	14,650,134	14,650,134	20,141,937	5,491,803	37.5

주: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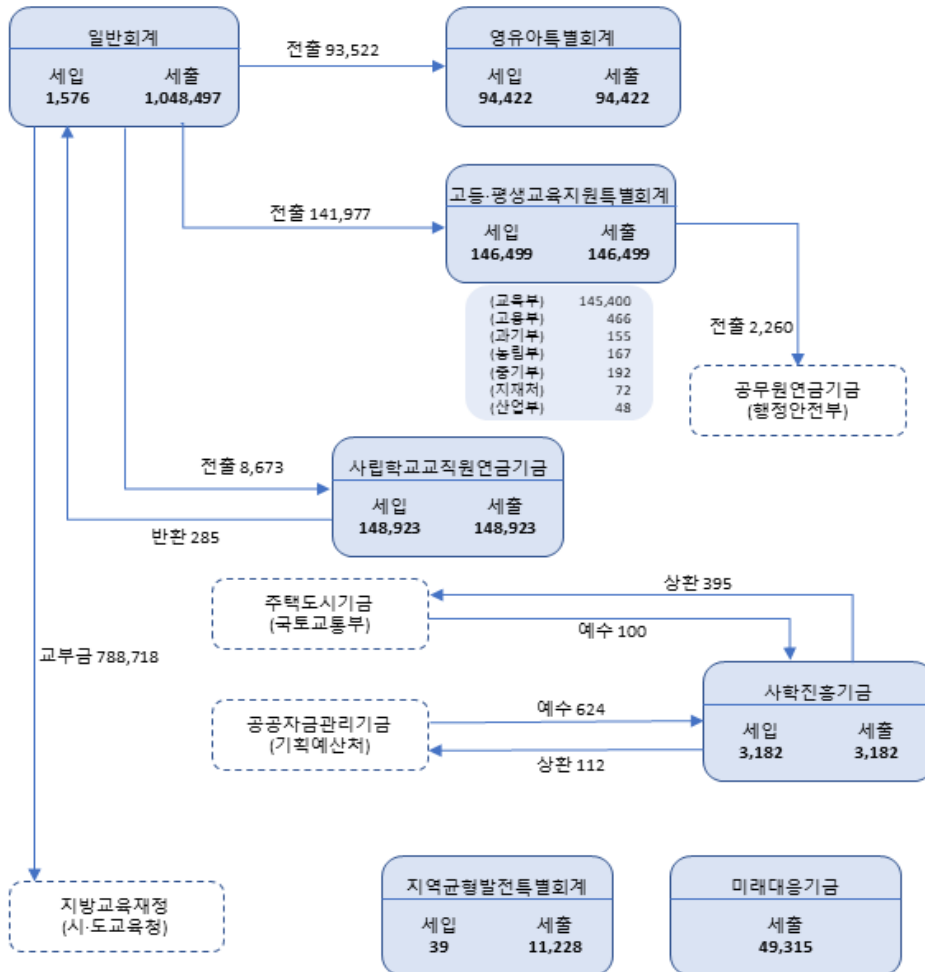
일반회계의 경우 영유아특별회계로 9조 3,522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4조 1,977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부담금 8,673억원이 전출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 미집행된 국고 대여학자금 반환금 285억원을 전입 받는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부담금 2,260억원이 전출된다.

사학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12억원, 주택도시기금으로 395억원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각각 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사학지원을 위하여 624억원을 예수받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100억원을 예수받는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자원 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2026년 7,965억원 → 2027년 1조 1,698억원), ② 거점국립대 혁신(2026년 6,487억원 → 2027년 7,944억원),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2026년 2조 1,403억원 → 2027년 1조 2,000억원),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8,966억원) 사업 등 지역·청년 지원 강화 사업이 개편·확대되었으며, ③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3,280억원),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6,00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나,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세출예산은 최근 집행액에 크게 못 미쳐 초과수입을 통한 부족 재원 확보와 정상적인 시험 운영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응시 수요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은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신설과 지원 학년 확대에 따른 증장기 재정부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인재 유치와 중도 이탈 방지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1세반에 병행 적용되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와의 중복지원 방지 및 지원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은 국산 AI 경쟁력 강화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제 이용수요에 기초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제공 기능과 사용 한도를 고려하여 공동구독의 경제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특성화지원은 인재양성과 R&D 협력 등 중장기 과제를 지원함에도 단년도 계속사업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년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편성·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 대학지원 사업과의 역할 분담 및 자원 공동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 2조 3,940억원 규모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중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대학생 마음 건강 위기 예방 및 대응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대 신설 사업은 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따라 의학관 신축 등 교육시설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 중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은 지역 인재 유치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는 대학·전문대학 학생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지원은 사립대 이공계 특화 연구·실습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은 지방 국립대학별 발전 방향에 따라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2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2,000
	지역의대 신설 사업	4,000
미래대응기금 (8개)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교육부)	19,960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교육부)	465,000
	대학창업교육기반고도화(교육부)	47,000
	지역균형발전장학금(교육부)	328,015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교육부)	691,000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교육부)	600,000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교육부)	30,000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교육부)	207,000
합 계		2,393,975

자료: 교육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증액되었고, ②거점국립대 혁신사업은 3개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및 대학당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③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은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물량확대와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④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기본 평생학습 운영지원이 확대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개)	보통교부금	69,004,889	73,582,087	76,505,639	2,923,552	4.0
	국가지책 특별교부금	1,261,828	1,352,842	1,419,692	66,850	4.9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30,914	676,421	709,846	33,425	4.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5,000	15,000	41,948	26,948	179.7
	교육급여	171,058	171,058	188,984	17,926	10.5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0,304	225,473	236,615	11,142	4.9
	해외 한국어 보급	21,684	21,684	28,593	6,909	3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7,055	7,055	9,909	2,854	40.5
	AI 디지털 유년비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200	200	2,130	1,930	965.0
	UNESCO 브릿지 지원(ODA)	2,070	2,070	2,869	799	38.6
	민간보육시설지원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23	40	17	73.9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3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41,546	541,546	642,228	100,682	18.6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75,840	175,840	254,987	79,147	45.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116,057	5,116,057	5,182,976	66,919	1.3
	인문사회 기초연구(R&D)	288,357	288,357	348,922	60,565	21.0
	한국장학재단 출연	401,900	401,900	450,741	48,841	12.2
	국립대학육성사업	224,850	224,850	268,037	43,187	19.2
	전문대학 혁신 지원	590,725	590,725	614,725	24,000	4.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700,716	700,716	724,677	23,961	3.4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8,840	8,840	20,190	11,350	128.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	-	8,920	8,920	순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수입대체경비)	8,719	8,719	13,405	4,686	53.7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5,394	5,394	8,794	3,400	63.0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1,826	1,826	3,534	1,708	93.5
영유아특 별회계 (3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470,335	642,876	172,541	36.7
	영유아보육료 지원	3,663,514	3,663,514	3,795,904	132,390	3.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182,864	2,184,435	2,273,574	89,139	4.1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1개)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	-	896,581	896,581	순증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4개)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5,266,435	5,266,435	5,630,226	363,791	6.9
	정보시스템 구축 (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6,990	6,990	31,226	24,236	346.7
	국고대여학자금용자 (사립학교연금기금)(용자)	31,741	31,741	51,678	19,937	62.8
	퇴직수당급여 (사립학교연금기금)	752,582	752,582	766,023	13,441	1.8
사학진흥 기금 (2개)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용자)	69,191	69,191	81,570	12,379	17.9
	정보시스템 운영(사학진흥기금 (정보화)	696	696	1,394	698	100.3
미래대응 기금 (5개)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75,012	75,012	526,908	451,896	602.4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62,461	290,761	551,885	261,124	89.8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648,700	648,700	794,350	145,650	22.5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R&D)	622,300	622,300	646,895	24,595	4.0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15	815	23,500	22,685	2783.4

주: 1)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의 실소요를 반영한 세출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¹⁾ 사업은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연수시설 운영,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글로벌역량강화연수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 예산 대비 4억 8,400만원(6.6%) 증액된 7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16,557	7,334	7,334	7,818	484	6.6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14,115	5,537	5,537	6,211	674	12.2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1,508	996	996	869	△127	△12.8
연수시설 운영	386	419	419	381	△38	△9.1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초청활용	303	283	283	267	△16	△5.7
글로벌역량강화연수운영	245	99	99	90	△9	△9.1

자료: 교육부

내역사업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 및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공고, 출제, 시행, 채점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532-650

한편,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세입(면허료및수수료) 예산 규모는 86억 8,000만원이었으나, 조정안에 따라 16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면허료및수수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16,737	5,509	5,509	8,680	16,737	11,228	203.8

자료: 교육부

최근 K-컬처 확산, 시험 성적 활용처 확대²⁾ 등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2026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지원자 수 현황]

(단위: 회, 명, 개국)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년 (예상)
시행횟수	6	7	9	12	13	15
지원자 수	330,016	357,395	421,812	493,287	566,665	575,390
국가 (한국포함)	75	81	88	89	89	98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세출예산은 최근 집행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초과수입을 통한 부족 재원 확보와 정상적인 시험 운영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응시 수요와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서 내역사업인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의 세출 예산은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왔는데, 국립국제교육원(책임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을 초과수입 편성을 통해 확보하여 시험을 운영해왔다.

2) ('25) 홍콩 대입 시험 활용, ('26) 베트남 대입 시험 및 고교 졸업시험 활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편성 관련 규정]

<p>「국가재정법」</p> <p>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p> <p>「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p> <p>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p> <p>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p> <p>〈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

한국어능력시험의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아 초과수입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초과수입에 대하여 초과지출을 승인받아 세출을 집행해왔다.

다만, 2027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12억 2,800만원 증액된 167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400만원 증액된 62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추이와 달리 2027년도 예산안에서 세입 예산만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105억원 적게 편성되었다.

그런데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의 최근 3년간 집행액³⁾이 121억원~167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7년도 세출예산 62억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간 집행액 ('24) 12,105백만원 → ('25) 14,115백만원 → ('26) 16,777백만원(예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세입·세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지원자 수	세입 (면허료 및 수수료)			세출 (수입대체경비)					
		예산액 (A)	수납액 (B)	초과 수입액 (B-A)	예산액 (C)	초과지출 승인액	예비비 등	예산현액	집행액 (D)	집행률 (D/C)
2021	330,016	8,162	9,215	1,053	5,010	3,982	44	9,036	8,769	175.0
2022	357,395	5,383	7,286	1,903	5,245	2,517	2,272	10,034	9,568	182.4
2023	421,812	8,700	13,078	4,378	6,086	5,132	-	11,218	10,635	174.7
2024	493,287	6,546	14,827	8,281	6,546	5,948	-	12,494	12,105	184.9
2025	566,665	6,775	16,736	9,961	6,786	8,483	4	15,273	14,115	208.0
2026. 8월 기준	575,390 (예산·예상)	5,509	11,450	5,941	5,537	9,950	-	15,487	10,193	184.0
2027	58만여명 (예산·예상)	16,737	-	-	6,211	-	-	-	-	-

자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16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100억원 규모의 초과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이 약 267억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이는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약 80만~100만명에 달해야 징수 가능한 수준이다.⁴⁾ 따라서 현실적으로 초과수입 발생을 통한 초과지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국회는 한국어능력시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에 대하여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였는바,⁵⁾ 교육부는 실수요에 기초한 적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초과수입 발생에 의존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을 보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경우에는 세출예산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25년) 56만명, ('26년) 57만명 예상. ('27년) 58만여명 예상

5)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한국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업에서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적정액으로 편성할 것

한국어능력시험은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최근 5년간 매년 시행횟수가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 예정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 예산 약 1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험 성적이 활용되고 있는 체류자격·교육 등 주요 분야의 관련 절차 및 요건 충족에 상당한 지장 초래가 우려된다.⁶⁾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상 응시수요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한 세출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활용처 현황]

구분	관련 기관	관련 지침	활용처
국내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졸업 요건으로 토픽 활용 가능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국내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항목 중 ‘공인언어능력(한국어)’ 지표로 토픽 2·3·4급 활용 ※ ‘신입생 40% 이상 3급, 재학생 40% 이상 4급 보유’가 평가지표로 활용
	법무부	「사증 발급 안내 매뉴얼」	· 20개 이상 체류 관련 자격에 반영
	국내 기업	기업의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지침 등	· 외국인 직원 채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
	대학	대학 학사지침/유학생 규정·운영 지침	· 한국어 과목 면제(이수 인정)
국외	대학	대학 학사지침	· 한국어학과 학점 인정, 졸업 요건 등
		홍콩대입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활용 양해각서 베트남 교육훈련부 결정문	· 대입 성적 인정 ※ (‘25년) 중국(홍콩), (‘26년) 베트남
	고등학교	베트남 교육훈련부 결정문	· 고교 졸업시험 면제 ※ (‘26년) 베트남
	한국 기업	기업의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지침 등	· 현지 직원 채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

자료: 교육부

6)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세출안(62억원)은 실제 필요 예산액의 1/3 정도로 2027년 시험 예정 횟수(15회) 중 4~5회만 실시 가능한 규모임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내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 필요

가. 현 황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¹⁾ 사업은 시·도 행정경계를 넘어 5극3특 등 초광역 단위에서 대학 간, 지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인재양성·산학협력을 촉진해 국토공간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사업으로²⁾ 예산안에는 8,96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	-	-	896,581	순증	순증
5극3특 인재양성지원	-	-	-	213,331	순증	순증
특성화 지방대학	-	-	-	545,500	순증	순증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	-	-	-	5,000	순증	순증
첨단분야 공유대학	-	-	-	115,000	순증	순증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	-	-	5,750	순증	순증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	-	-	12,000	순증	순증

자료: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은 RISE 사업을 앵커 사업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RISE 사업에서 시·도 자율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초광역 단위의 대학 간, 지역 간 협업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별도 분리 편성된 것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er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01-401

2) 고특회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2301-400)'에서 2027년 동 사업으로 분리

나. 분석의견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공유대학 등 내역사업 간 지원 분야·참여대학·교육과정이 중첩되어 유사한 자원이 별도로 구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 역할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영 과정의 연계·공동활용 여부를 점검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시·도 경계를 넘어 대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과 연구,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첨단분야 공유대학, 5극3특 공유대학,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 등이 있다.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내역사업별 2027년도 예산산출내역]

내역사업명	예산산출내역
5극3특 인재양성 지원 (213,33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극3특 공유대학 : (6개×10,000백만원) + (3개×20,000백만원) = 120,000백만원 ·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 7개 모델 × 13,333백만원 = 93,331백만원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 (545,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모델 × 30,261백만원 = 544,700백만원 · 사업관리비 800백만원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 (5,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 대학 x 125백만원 = 5,000백만원
첨단분야 공유대학 (115,00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지원 5개 × 11,000백만원 + 신규지원 6개 × 10,000백만원 = 115,000백만원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5,7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5개 컨소시엄 × 750백만원 + 전문대 5개 컨소시엄 x 400백만원 = 5,750백만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12,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교 6교 × 1,000백만원 = 6,000백만원 · 사업 수행교 3교 × 2,000백만원 = 6,000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이 중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인프라를 공유하여 소속 지역·대학·학과에 관계없이 첨단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5극3특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권역 내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교육과정과 연구,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두 사업이 지원 분야와 컨소시엄 구성 방식, 사업목표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업 간 차별화된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컨소시엄으로 각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반면, 5극 3특 공유대학은 각 거점국립대가 소재한 지역의 대학과 구성하는 권역단위 컨소시엄으로 거점국립대 자원을 5극 3특 내 타 대학과 공유·협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첨단분야 공유대학과 5극3특 공유대학 비교]

구분	첨단분야 공유대학	5극3특 인재양성 지원 (5극 3특 공유대학)
공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내역사업 ※ '27년 2주기 사업부터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내 내역사업	
지원 분야	국가가 지정한 첨단산업분야	지역 전략산업 중 지방정부-대학이 정한 분야
지원 대상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거점국립대(주관)·국중·사립·전문대 공유대학 9개 모델
지원 방식	성장엔진 연계 패키지 지원(3개), 공모(3개)	5극3특 단위 지방정부-대학 간 협업으로 공유대학 추진계획 수립
지원 규모	2027년 1,150억원 (계속 5개/컨소시엄당 110억원 내외, 신규 6개/컨소시엄당 100억원 내외)	2027년 1,200억원 (9개/공유대학당 100억원/ 패키지 지원대상 대학 추가 100억원)
사업 기간	4년(2027~2030년)	4년(2026~2029년)
구성 방식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수도권 대학 포함 필수)	각 거점대가 소재한 5극3특 권역 내 대학으로 구성 (수도권 등 타 권역 포함은 선택사항)
사업 내용 (목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인프라를 공유하여 소속 지역·대학·학과에 무관히 첨단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5극3특 권역 단위로 대학 간 교육·연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공유대학을 구성해 거점국립대의 자원을 5극3특 내 타 대학과 공유·협업하여 지역 교육·연구의 질 제고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그러나 첨단분야 공유대학의 지원 분야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은 5극3특 공유대학의 주력산업 분야(3대 메가프로젝트, 전략산업분야)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또한 5극3특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를 비롯한 일반대학(국중대·사립)과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어 두 사업의 참여대상도 중첩된다.³⁾

[첨단분야 공유대학과 5극3특 공유대학 지원 분야 현황]

[첨단분야 공유대학 지원 분야]				
A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 (바이오헬스)	C (첨단부품·소재)	D (디지털)	E (환경·에너지)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신산업
		반도체소·부·장	실감미디어	
미래자동차	그린바이오	이차전지	빅데이터	에코업(業)
		첨단소재·나노융합 (첨단신소재, 나노, 3D 프린팅)	차세대통신	
항공·드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데이터 보안·활용 융합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료: 교육부

[5극3특 공유대학 주력산업분야]

구분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퍼지컬AI, 데이터센터
전략산업분야	바이오, 반도체(차세대·특수),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 리, AI, 방산, 첨단로봇, 우주항공, 그린에너지, 차세대원자 력(SMR), 첨단조선·해운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특히 첨단분야 공유대학에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 참여형’이 있어,⁴⁾ 지방정부와 대학이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협업하는 5극3특 공유대학과 추진체계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수행 내용에서도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인프라 공유뿐 아니라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프로젝트

3) 두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기대효과도 유사하다. 5극3특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의 자원역량을 he지역 대학에 공유확산”한다는 것이고,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권역을 넘어서 대학 간 분산된 자원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지역 격차 해소”를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2027년부터 ‘지자체 참여형’이 아닌 ‘대학주도형’으로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와 기업 인증형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극3특 공유대학 역시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수자에 대한 기업 인증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이수 인증 방식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지원 분야나 참여 대학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개별 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두 사업이 유사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각각 개발하거나 시설·장비를 별도로 구축할 경우 기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사 투자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공유대학 사업 추진 시 특성화지방대학(글로벌) 사업을 통해 개별 대학이 구축한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업도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창업 및 정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 협력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 프로젝트) 개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하여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투자**

*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행·재정 지원

** 교당 5년간 1,000억원 지원(단독 기준), 규제특례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 글로벌대학 사업 체계 개편 〉

- ① (거점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계 ‘특성화 연구거점대학’ : ‘26년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이관하여 사업 관리 → ‘27년부터 ‘거점국립대 혁신사업’으로 이관
- ② (국가중심대·사립대) ‘RISE 재구조화’ 연계 ‘지역혁신 선도대학’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내 사업 관리 → ‘27년부터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에 편성

글로벌대학	'25년	'26년	'27년
거점국립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예를 들어 한림대는 글로벌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 협력 거점인 ‘M-Campus’ 8개를 구축하여 대학의 기술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 지역문제 공동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도 RISE 사업 평가에서도 프로젝트·단위과제의 분절적 관리 우려가 지적된 바 있어 사업 간 연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내 사업별 역할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유사·중복 여부와 연계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교육·연구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특성화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편성 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국립대학육성¹⁾ 사업은 국가중심국립대(16교)와 교대(11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국립대 육성사업(일반 재정지원)과 특성화지원(신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431억 8,700만원(19.2%) 증액된 2,680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국립대학육성사업	224,529	224,850	-	268,037	43,187	19.2
국립대학육성사업	224,529	224,850	-	268,037	43,187	19.2

자료: 교육부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300억원이 편성된 ‘특성화 지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5국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우수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중심국립대²⁾를 국가 전략 산업 인재 양성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규모 국립대학(국가중심국립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반도체, 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국 3특 성장엔진 분야의 공동교육·연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7년에 국가중심국립대 2~3교로 구성된 컨소시엄 3개를 선정하여 각 10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04-301

2) 일반국립대 12교(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경국대, 금오공대, 국립한밭대, 한경국립대, 한국교통대, 국립부경대, 서울과기대), 특수목적대 4교(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체대)

[2027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 사업출연금(350-02) : 224,850백만원 가. 국립대학육성사업 (224,850백만원) · 일반국립대 지원 8,292백만원 × 27교 ≒ 223,900백만원 · 사업관리비 9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68,037백만원 가. 국립대학육성사업 (268,037백만원) · 일반국립대 지원 8,773백만원 × 27교 ≒ 236,887백만원 · 컨소시엄 지원 10,000백만원 × 3개 컨소시엄 = 30,0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150백만원

주: 1. 일반국립대(27교): 국가중심국립대(16교) + 교대(11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특성화 지원은 학과구조 조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R&D 협력 등 중장기 과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어려운 단년도 계속사업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 편성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지원은 국립대학육성 사업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2018년부터 5년 주기(2018~2022)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수행 중인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는 단년도 사업의 특성상 인력 양성, R&D 협력과 같은 장기적 과제를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성화 지원은 주요과제로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인력양성과 지역 R&D협력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중심국립대학 특성화지원 주요 과제]

구분	핵심인력양성	지역R&D협력
지원 규모	300억원 (국가중심국립대 3개 컨소시엄 선정 (컨소시엄별 2~3교) x 약 100억 내외)	
주요 과제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대학 내 학과구조 조정, 대학 간 역할 분담·공동 운영 등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권역별 특화 인재 양성 거점 추진 - 대학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 권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메가프로젝트,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산업분야와 지역 내 첨단 기업과 산학 일체형 R&D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연구 기관 역할 수행 - 기업 연구소 유치, 공동 R&D 컨소시엄, 산학 통합 생태계 조성 등 산학연구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지역 산업 특화 R&D 지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이와 같은 대학 내 학과구조 조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업 연구소 유치 및 산학 일체형 R&D 협력 수행 등은 모두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준비과정과 기간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특히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반도체 및 유관 학과의 확대·개편과 대학 간 융합전공과정 운영 등은 학생의 전공 선택, 학업 이수 및 취업 등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업의 장기적 지속성과 안정적인 지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 지원은 2027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체계에서 “특성화 인센티브”로 추진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에 특성화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예정이다. 다만, 2027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은 사업 여건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2월 중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특성화 대학 인센티브 배분(안)]

정량성과	정성성과	
포물러 배분	대학혁신 성과	특성화 인센티브(선택)

자료: 교육부

특성화 지원이 편성된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방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³⁾ 이와 같이 사업의 지속성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대학들이 최초 연도 지원계획만을 토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과구조 조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R&D 협력 등 중장기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특성화 지원은 대학이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년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년도 계속사업인 국립대학육성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정된 컨소시엄의 총 지원기간과 연차별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반영하는 환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 지원은 국가중심국립대학의 인재양성과 지역특화 R&D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바, 성장엔진 분야의 인재양성과 교육·연구자원 공유를 지원하는 다른 대학지원 사업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동일 권역·산업 분야의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자원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지원은 중소규모 국립대학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융합 분야를 공동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만 거점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분야의 인재양성과 연구·산학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연구자원을 타 대학과 공유하는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점국립대 혁신사업⁴⁾의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AI 거점대학과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⁵⁾의 공유대학 사업들은 5극 3특 성장엔진 또는 첨단분야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은 산학연 협력과 지역산업 R&D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3)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화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에 대한 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설명이다.

4)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70

5)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01-401

[5극3특·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R&D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산학연일체형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성장 잠재력 제고
	AI 거점대학	거점국립대 내 AI 교육·연구 거점을 확립하여 AI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성장엔진 AX 생태계를 조성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5극3특 인재양성지원 (공유대학)	5극3특별 거점국립대 중심의 대학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 공동 추진 지원
	첨단분야 공유대학	수도권-비수도권 등 권역을 연결하는 공유대학 체계를 통해 대학 간 교육과정·인프라·교원 등을 공유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부는 학생·교원 수, 재정규모 및 연구여건,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거점국립대는 권역의 교육·연구 거점 및 지역 혁신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중심국립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인력 양성 등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특성화 대학으로 기능을 분담한다는 설명이다.

대학별 규모와 연구역량, 지역 내 역할 등이 상이하므로 대학 유형별 재정지원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각 대학지원 사업이 국가전략산업 및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사업은 R&D 및 산학협력까지 포함하고 있어 동일 권역·산업 분야에서는 유사한 교육과정과 교육·연구시설 등이 중복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부가 기존 RISE 사업을 재구조화하며 개편한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은 초광역 단위에서 대학 간, 지역 간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이와 별개로 대학 유형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자원의 공동 활용보다 유사한 교육과정과 인프라의 신규 구축이 우선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성화 지원 사업 추진 시 동일 권역·산업 분야에서 시행되는 타 사업의 지원내용과 구축 자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간 기능 분담 및 공동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여 중복투자·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¹⁾²⁾ 사업은 지방정부·대학·산업계 등이 협력해 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하여 ‘지역인재육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9,403억 3,500만원(43.9%)이 감액된 1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³⁾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941,000	2,140,335	2,140,335	1,200,000	△940,335	△43.9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644,651	2,140,335	2,140,335	1,200,000	△940,335	△43.9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01	-	-	-	-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00	-	-	-	-	-
대학 산학협력단지	14,000	-	-	-	-	-
조성 지원	25,800	-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5,998	-	-	-	-	-
선도대학 육성	14,200	-	-	-	-	-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4,750	-	-	-	-	-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9,600	-	-	-	-	-
마이스터대 지원	-	-	-	-	-	-
전도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	-	-	-	-
선도대학 육성지원	-	-	-	-	-	-

3) 감액분은 2027년도 신규사업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으로 이관된 부분이며, 2027년도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예산안 규모는 8,966억원이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앵커)은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개편된 것으로, 교육부는 RISE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한계⁴⁾가 나타남에 따라 2026년 4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하 RISE 사업이라 함)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이하 ‘앵커 사업’이라 함)으로 재구조화하였다.

기존 RISE 사업의 17개 시·도별 사업은 학생지원·인재양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앵커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5극3특·초광역 단위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하면서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등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부터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다.

[RISE 사업과 앵커 사업 추진체계 비교]

구분	RISE 이전	RISE 도입('25.)	앵커 도입('26.~)
개요 · 목적	각 재정사업 개별 운영	파편적으로 추진되던 재정사업을 단일 체계(RISE)로 통합해 지방정부 중심 고등교육 체계 구축	17개 지방정부 단위 추진체계에 더해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체계 구축
대상	사업별 추진대학	17개 지방정부 (→ 대학 등)	17개 지방정부 및 초광역 단위 (→ 대학 등)
기간	각 재정지원 사업별 상이	'25.3.~'30.2.	'25.3.~'30.2.
예산		('25.) 19,410억원	('26.) 21,403억원 ('27.) 지방정부 단위 12,000억원 / 초광역 단위 8,966억원
성과		지방정부별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5극3특 단위 인재양성체계 구축

자료: 교육부

4) ▲학생 등 정책 수요자 수요에 기반한 인재육성에 대한 고려 부족, ▲소규모 과제로의 과도한 분절로 인해 자원 집중을 통한 규모 있는 지원 제약, ▲행정 경계 칸막이로 인한 초광역 단위 산학협력 제한 등

나. 분석의견

첫째, RISE 본사업 시행 1년 만의 사업 재구조화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부담이 발생하였고 앵커 사업 분리 전후의 실적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앵커 사업의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분리 편성시 기존 사업의 실적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RISE 사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2026년 4월에 교육부가 사업 재구조화를 발표하면서 각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명이 'RISE'에서 '앵커'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RISE센터와 RISE위원회 등 사업 조직명과 대학 내 사업단 명칭, 학사 행정 시스템까지 전부 변경하거나, RISE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명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시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첫 번째 앵커 전환 설명회에서는 ① 명칭 변경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미흡하였고, ② 기존 이월사업의 명칭과 기본계획 개편의 적용연도 등 전환 시점과 경과조치가 불명확하였으며, ③ 컨소시엄 구성 등 세부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사업 수행 주체와 참여 절차에 대한 교육부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교육부의 조기 사업 개편으로 현장에서는 기존 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개편 내용과 적용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였는바, 특히 교육 과정 운영과 대학·기업 간 협력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추진체계와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편, 기존 RISE 사업에서 통합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는 2027년부터는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세부사업)의 6개의 내역사업⁵⁾으로 분리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분리된 내역사업별 과거 예산과 집행실적, 성과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5국3특 인재양성, 특성화 지방대학, 의대교육 혁신사업, 첨단분야 공유대학, 대학창업교육 체제구축,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2027년도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내역사업의 추진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5극3특 인재양성	-	-	-	-	-	-	-	2,000	2,133
특성화 지방대학	-	-	-	-	5.8	1,720	3,769	3,723 (거점대) ²⁾ 2,362	5,455 (거점대) ²⁾ 3,170
의대교육 혁신사업	-	-	-	-	-	-	552	50	50
첨단분야 공유대학	-	-	832	890	1,443	2,010	2,010	1,973	1,150
대학 창업교육	-	-	-	-	52	60	60	58	58
대학내 산단	40	80	80	60	40	140	140	180	120

주: 1. 2024년까지는 개별 운영, 2025~2026년 RISE사업에서 통합운영, 2027년부터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1) 국립대육성사업(세부사업)으로 편성

2) 거점국립대혁신사업(세부사업) - 특성화지방대학 지원(내역사업)으로 편성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잦은 사업구조 개편을 지양하고, 개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전환 일정과 경과조치를 사전에 안내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개편시 사업 분리 전후의 지원 범위와 예산 이관 내역, 연도별 집행실적 및 성과를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률적인 지방비 의무매칭률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지방비 편성비율 중심의 성과지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의무매칭률 차등화를 검토하고 지역 취업·정주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도록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7년에 시도 자율사업 추진을 위해 약 1조 1,93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역균형 포물러⁶⁾ 및 2026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약 5,000억원)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운영 중인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상위지역 순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매칭률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된다.

다만, 인센티브 배분과 별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의무 매칭 재원 마련 부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년 예산부터 지역균형 포물러를 도입하고 연계투자 개념을 도입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지방비 매칭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2025년도 RISE 사업의 지방정부별 매칭 현황을 보면 지방비 매칭률은 최소 기준인 20%에서 많은 경우 35.85%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액도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의무매칭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대전, 세종, 제주 4곳은 2025년 11월까지도 매칭 예산이 의무매칭률(2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광주와 세종의 경우 2025년 말까지 20%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1차년도 RISE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2월까지 매칭 예산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별로 매칭 예산 마련의 부담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앵커(기존 RISE) 사업 지방정부별 매칭 현황 및 평가결과]

(단위: 백만원, %)

지역	국비	지방비	사업비 합계	매칭률	2025년 평가결과
서울	63,998	21,650	85,648	33.83	C
부산	163,685	32,737	196,422	20.00	S
대구	85,817	17,177	102,994	20.02	B
인천	22,310	4,462	26,772	20.00	B
광주	92,965	18,593	111,558	20.00	S

6) 지역 경제 여건(GRDP·재정자립도), 사회 여건(청년유출률·지역소멸지수) 및 대학 수 등에 따라 배분('27년안 2,500억원)

(단위: 백만원, %)

지역	국비	지방비	사업비 합계	매칭률	2025년 평가결과
대전	77,976	15,595	93,571	20.00	A
울산	51,852	10,371	62,223	20.00	A
세종	15,179	3,036	18,215	20.00	C
경기	65,263	13,432	78,695	20.58	A
강원	141,125	30,141	171,266	21.36	A
충북	109,034	23,219	132,253	21.30	C
충남	135,237	30,065	165,302	22.23	S
전북	117,211	42,017	159,228	35.85	C
전남	95,191	32,447	127,638	34.09	B
경북	210,286	50,874	261,160	24.19	B
경남	138,186	27,650	165,836	20.01	A
제주	45,674	9,134	54,808	20.00	B
합계	1,630,990	382,605	2,013,595	23.46	

주: 2026년도 매칭률은 사업연도 종료 시점('27.2.28.)에 파악될 예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지방비 매칭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사업 평가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나, 재정 여력이 낮은 지방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려워 성과 창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성과평가에 따른 추가 국비 확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는 2025년 8월 교육부에 RISE 사업의 국고보조금 상향을 권고한 바 있고, 2026년 동 사업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지역 여건과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 매칭률 차등 설정의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의 무매칭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 사업에 설정된 성과지표는 '앵커 지방비 편성비율(%)'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목표치 비율을 상향 설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주도 앵커 체계에서 지방비 부담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지표는 지역 취업·정주라는 사업의 최종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는 매해 측정 가능한 지표로서 ‘앵커 지방비 편성비율’을 반영한 것이며, 앵커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중간평가(‘27년) 및 종합평가(‘30)에서 지산학연 취업 증가율,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지역 내 취·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취업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도 지역 내 취업률·유지취업률 및 정주 여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앵커 지방비 편성비율 (단위: %)	목표	-	-	20	22	23	지자체 주도 앵커 체계에서 지방비 부담 필요성,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도별 지방비 편성액 / 국비 편성액
	실적	-	-	23.4				
	달성도	-	-	117				

주: 지방비는 지방정부 예산서에 계상된 시·도비, 시·군·구비 및 글로벌대학 사업비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중 대학·학생에 지원·교부하는 예산 등을 의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5-1.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참여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필요

가. 현 황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¹⁾은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위해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26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	-	-	526,908	순증	순증
인건비 지원	-	-	-	123,886	순증	순증
보육료 지원	-	-	-	396,020	순증	순증
국공립 인센티브	-	-	-	7,002	순증	순증

자료: 교육부

정부는 2025.9. 국정과제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포함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위해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무화 없이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 구조가 상이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인건비 지원시설)은 공적 교육인프라로, 추가 채용하는 교원 인건비 일부(80%)를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 등(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개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로 보육료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6-300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5세반
1:3	1:5	1:7	1:15	1:20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2026년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국공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민간 등)이라는 내역/세부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7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이 별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면서²⁾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이관되었고, 신규 내역사업인 ‘국공립 인센티브’도 신설되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관련 사업 개편 현황]

구분	2026		2027(안)	
국공립	영유아 특별 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¹⁾ (내역사업)	미래 대응 기금	교사대아동비율개선 (세부사업)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인건비 지원
민간		영유아보육료 지원 (세부사업)		국공립 인센티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료 지원

주: 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참여율이 낮고 추가 교사 인건비와 반 운영비 부담이 참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규 인센티브의 지원단가가 이러한 부담을 적정하게 보완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202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에는 먼저 0세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 어린이집 0세반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참여율이 55.1%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참여율이 35.5%로 전체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현원별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참여율(0세반)]

(단위: 개, %)

어린이집 유형	4명 반	3명 반	2명 반	1명 반	참여율
가정	28	3,926	10,258	1,028	74.1
국공립	85	8,354	4,399	244	35.5
민간	103	6,298	6,382	582	52.1
법인·단체등	19	217	272	34	56.5
사회복지법인	40	512	579	68	54.0
직장	7	646	804	190	60.4
협동	1	13	24	1	64.1
총합계	283	19,966	22,718	2,147	55.1

주: 2026년 7월 기준

자료: 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을 위해 추가 교사를 배치하더라도 교사 인건비의 80%만 지원되어 나머지 비용을 시설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추가 부담이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 추가반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 외에도 보육실 확보, 교재·교구 구입 등 추가 운영비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0세반 전체 교사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예산 281억원 증액분이 의결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202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증액 내역]

(영유아특별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 내내역사업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750억 1,200만원)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1:2)에 따라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유인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0세반 전체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인상하기 위하여 281억 3,100만원 증액

(0세반 교사 90% 지원)

전체 0세반 교사 15,100명 × 35,284천원 × 10%(지원비율 인상분, 80%→90%)
× 52.8% = 28,131백만원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한편 교육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면서 기존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외에 ‘국공립 인센티브’ 내역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특히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0세반, 1세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0세반에 20만원, 1세반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³⁾

[국공립 인센티브 2027년도 계획안]

국공립 인센티브 : (2027 요구) 7,002백만 원

- (요구)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0세반, 1세반 추가 개설을 위한 인센티브 요구
- (산출) 3,961개 * 200천원 * 12개월 * 53.8% + 2,924개 * 100천원 * 12개월 * 53.8%

자료: 교육부

3) 교육부는 추가교사로 인한 아동 현원 증가 시나리오별 부모 보육료 증가와 추가 교사 인건비의 어린이집의 자체 부담(20%) 일부 완화를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교사 인건비 지원율의 상향은 기존 지원대상 교사 전체에 광범위한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추가반 개설 인센티브는 실제로 반을 추가 개설한 시설에 선별적으로 운영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인건비 외 운영부담까지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⁴⁾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및 영아반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추가교사 인건비의 부담 등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신설된 국공립 인센티브의 지원단가(0세반 20만원, 1세반 10만원)가 실제 추가교사 인건비 자부담 및 반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적정히 보전하는 수준인지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집행 예시) 영아 낮잠 공간 마련 등 시설개선, 기존 노후 교재교구 개선, 이유식 등 급·간식 재료 질 제고와 같은 보육프로그램 개선에 사용 가능

5-2.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관리 유의 및 지원체계 합리화 필요

가. 현 황

영유아보육료 지원⁵⁾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연장보육료, 미지급금 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323억 9,000만원(3.6%)이 증가한 3조 7,95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영유아보육료 지원	3,353,124	3,663,514	3,663,514	3,795,904	132,390	3.6
0~2세 보육료	2,987,079	3,115,893	3,115,893	3,512,537	396,644	12.7
장애아보육료	75,266	79,748	79,748	76,611	△3,137	△3.9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28,637	27,059	27,059	18,055	△9,004	△33.3
연장보육료	83,110	84,407	84,407	117,594	33,187	39.3
미지급금 지원	85,011	34,761	34,761	26,540	△8,221	△23.7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93,939	70,389	70,389	44,485	△25,904	△36.8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251,175	251,175	- ¹⁾	-	-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82	82	82	82	0	0

주: 1)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2027년부터 별도 세부사업(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자료: 교육부

동 사업 내역사업 중 하나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 결원으로 인한 보육료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최저임금 지급 및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4년에 도입되었다. 2027년에는 1세반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1:5 → 1:4) 추진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

5)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1633-331

6) 이 중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2027년부터 별도 세부사업(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었다.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 산출내역]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0,389백만원 · (1세반) 12,642개 × 370천원 × 12개월 × 70.1% · (2세반) 14,702개 × 251천원 × 12개월 × 70.1%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44,485백만원 · (1세반) 4,646개 × 388천원(전년대비 3% 인상) × 12개월 × 70.0% · (2세반) 13,232개 × 264천원(전년대비 3% 인상) × 12개월 × 7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0세반과 달리 1세반에는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과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가 병행되어 일부 사례에서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시 중복지원에 유의하는 한편, 향후 두 제도의 정책목적과 지원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2026년까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시설 1세반에 대하여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2027년부터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지원이 1세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두 사업이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2026, 2027년 인건비미지원 시설 영아반에 대한 지원 변화]

구 분	2026		2027	
	교사대아동 비율개선 보육료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교사대아동 비율개선 보육료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0세반	O	X	O	X
1세반	X	O	O	O
2세반	X	O	X	O

1) 0세반은 2026년부터 1:3 → 1:2 추진

2) 1세반은 2027년부터 1:5 → 1:4 추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교육부는 1세반을 1개 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결원이 2명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액이 기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보다 적어지므로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 보육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세반과 달리 1세반은 2027년부터 두 사업 지원 제도가 병행 운영될 예정이므로, 두 사업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사대아동비율 개선과 기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의 중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원 규모에 따라 사업별 지원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원이 3명인 1세반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통해 월 45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공석 2명분인 월 77만 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현원 4명인 반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통해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공석 1명분인 월 38만 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1세반 현원에 따른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2026	2027		비고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교사대아동비율개선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2명	-	150천원 x 2명분	-	
3명	370천원x2명분	150천원 x 3명분	388천원 x 2명분	정원 50% 이상
4명	370천원x1명분	150천원 x 4명분	388천원 x 1명분	

- 주: 1. 1세반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은 1:5
 2.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액은 추가반 개설 등 사업 참여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함
 1)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사업 참여 반의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함
 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사업 참여 반의 결원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 재작성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1세반 지원 사업 2027년 예산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예산산출 근거
교사대아동비율개선 사업 - 보육료 지원	86천명 × 150천원 × 12개월 × 70.0%(국고보조율)
영유아보육료 지원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4,646개(공석 수) × 388천원(전년대비3%인상) × 12개월 × 70.0%(국고보조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한편, 어린이집 0세반은 2026년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 도입과 함께 기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원체계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2025년까지는 0세반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1·2세반만 인센티브 지원대상으로 남고 0세반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6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및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 산출내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93,939백만원 · (0세반) 7,161개 × 660천원 × 12 × 70.2% · (1세반) 12,642개 × 359천원 × 12 × 70.2% · (2세반) 14,702개 × 244천원 × 12 × 70.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0,389백만원 · (1세반) 12,642개 × 370천원 × 12개월 × 70.1% · (2세반) 14,702개 × 251천원 × 12개월 × 70.1%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 : 251,175백만원 (순증, 신규) · 63천명 × 474천원 × 12개월 × 70.1%

주: 1)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을 1:3 → 1:2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미지원 기관에 재원하는 0세반 아동에 보육료(월 474천원) 추가 지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교육부는 0세반에 대한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0세반은 결원이 1명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하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와 아동 현원이 2명인 경우 지원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이 중복이며,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지원이 크기 때문에⁷⁾ 영아반

7)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현원이 2명인 경우 629천원 지원

* 교사 대 아동비율 지원금 : 현원이 2명인 경우 948천원 지원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폐지하여도 정책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0세반과 달리 1세반은 2027년부터 두 사업 지원제도가 병행 운영될 예정이므로, 두 사업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사대아동비율 개선과 기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점에 현원이 4명 이상인 1세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해당하며 기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1세반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추가교사를 배치하여 교사대아동비율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과 별도 세부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추가 반 설치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추가반 설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반 재편에 대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별 지원 현황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사업의 정책목적과 지원 대상·지원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두 제도를 병행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원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교육부는 기존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추가 교사 배치 여부와 무관하게 교사 대 아동비율이 1:2인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지원하나, 1세반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추가 교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가. 현 황

대학생 AI 공동구독지원¹⁾ 사업은 전국 대학(원)생들의 학업·연구에 필요한 생
성형 AI 서비스를 공동구독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 단계에서 학생들의 AI 활
용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구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이며 계획안에
는 19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	-	-	19,960	순증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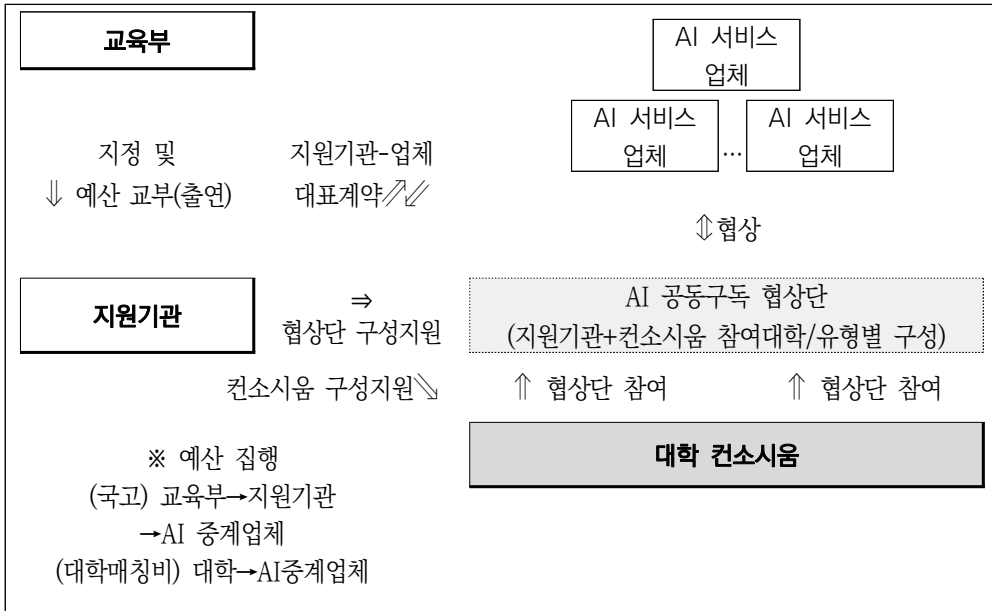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그 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과학기술원 등)의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학별로
소속 대학(원)생 AI 구독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지원기관에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상
단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사업 지원기관과 AI구독 중계업체가 대표계약하는 방식이
다. 사업기간은 '27~'28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추후 사업기간 연장 필
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00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집행절차]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학 단위의 대규모 AI서비스 공동구독은 예산이 소수 해외 AI서비스에 집중되고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서비스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산 AI 경쟁력 강화 정책과의 정합성 및 국산 AI 서비스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대규모 공동계약은 구매력을 활용하여 구독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수요와 예산이 소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동 사업은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구독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서비스 선정 기준과 가격 산정, 계약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해외 AI서비스 기업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학생들이 특정 플랫폼에 고착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산 AI 서비스의 참여·활용 가능성과 동 사업이 국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전 국민이 쉽

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서비스인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일상적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 AI서비스 의존과 접근 격차로 AI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AI모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생활형 서비스이고,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은 학습·연구에 필요한 고성능 AI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편으로는 해외 AI 서비스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AI 서비스 출시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 AI 서비스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전체의 정책방향과 적합성을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기간은 2년(2027~2028)으로 계획되어 있고 추후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인바, 특정 해외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집중과 플랫폼 종속 방지 측면에서 해외 AI서비스 구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 및 국산 AI 서비스의 참여·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공계열 학생 비율과 특정 대학의 이용 사례에 기초한 예산 추계는 최상위 유료 AI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능,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7년도 계획안은 예상 참여 학생 수와 학생 1인당 할당량, 사용량당 단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특정 1개 대학의 공동구독 사례에서 도출한 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동구독 시의 학생 1인당 할당량, 사용량당 단가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상 지원대상 인원을 산정한 방식에도 한계가 있는바, 교육부는 이공계열 재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전체 대학생의 30%를 AI 집중이용자로 가정하고,²⁾ A 대학교 사례에서 2026년 AI 구독 서비스 사용자(교직원·학생) 비율이 55.5%였던 점을 참고하여 실사용률을 60%로 적용하였다.³⁾

2) 이공계열 재학생 비율 4년제 36.3%, 전문대 30.6%, 대학원 30.9%

[2027년도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96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9,960백만원 가. AI구독비 (18,960백만원) · 지원 대상자 240만명 중 30% × 실사용률 60% × 인당 88천원 ¹⁾ × 단가 지원비율 50% 나. 사업운영비 (1,00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000백만원 × 1년 운영비

주: 1) 단가 88천원은 87,777원을 반올림한 값으로, 실제 예산은 87,777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교육부

그러나 이공계열 재학생 비율(30%)을 최상위 유료서비스의 수요로 간주하는 것은 전공계열과 실제 이용수요를 단순하게 동일시한 측면이 있다. 이공계열 내에서도 전공·교과목·연구활동에 따라 AI 활용 필요성이 다르고,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도 고급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학생 모두가 최상위 유료버전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이용 또는 과다 신청이 발생할 유인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학습 목적의 고비용 AI 구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인정되나, 학생별로 최상위 유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수요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셋째, 공동구독은 구매한 사용량을 여러 학생이 나누어 이용하므로 개인구독과의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제공 기능과 1인당 사용 한도를 비교하여 경제성과 교육·연구 수요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대학생들의 연구·학습 목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최상위 유료버전” 구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유사 사업을 수행한 A

3) AI 활용 기반과 학생 특성이 다른 특정 대학 1개 사례의 이용률을 전체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교육부는 2026년 10~11월에 대학별 대학생 수요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 사례를 기준으로 O사 AI Pro버전 개인구독 시 연 188만원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⁵⁾ 공동구독 시 1인당 연 8~9만원 수준으로 약 95.5%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개인구독은 한 사람이 해당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온전히 이용하는 반면, 공동구독은 대학이 구매한 전체 사용량을 여러 학생이 나누어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구독이 “동일한 서비스”를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구독 비용 외에 학생 1인이 이용가능한 사용량에 대한 비교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AI업체에서 개인구독시 1인당 한도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구독시 1인당 한도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AI 공동구독에 따른 비용절감 비교]

구분	개인 구독	공동구독 (A대 사례)
AI 모델 및 제공 서비스	O사 AI Pro (최상위 버전 언어모델 사용 가능, 멀티모달 기능(이미지·영상 생성 등) 코딩 Agent, AI Agent 개발 기능 등 포함)	
결제 방식	공식 라이선스 기반 개인별 구매	AI 구매대행 업체 기반 단체 구매
연간구독 비용	1인당 약 188만원	1인당 약 8~9만원
1인당 사용한도	비교 자료 확보 어려움	

자료: 교육부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구독과 공동구독에서 제공되는 사용 한도를 비교하여 공동구독의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제공되는 이용량이 교육·연구 목적을 충족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5) 챗GPT·제미니 유료구독 : 기본 월 2.9만원(일상적, 학습·과제 지원 수준),
고급 월 15~30만원(전문추론, 대용량 작업, 프로그래밍, 코딩 등)

가. 현 황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¹⁾ 사업은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으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쌓은 직무경험을 첫경력으로 연계하여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와 교통·숙박 등 참여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멘토링 및 대학의 실습학기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7년도 계획안에는 4,6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은 3년(2027~2029년)으로 설정되어 있다.²⁾

[2027년도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	-	-	465,000	순증	순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	-	-	465,000	순증	순증

자료: 교육부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10

2) [중기 재정계획(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	465,000	465,000	465,000	-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사업은 총 6만 명이 평균 5개월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정부의 실습지원비 지원에 따른 현장 실습 참여 인원 확대에 대비하여 참여 수요 및 실습기관 확보 현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2027년도 계획안]

예산	산출내역
465,000백만원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 465,000백만원 가. <u>정부 실습지원금(345,000백만원): 6만명×5개월×월 1.15백만원</u> 나. <u>참여비용지원(30,000백만원): 6만명×0.5백만원(월 10만원×5개월)</u> 다. <u>현장멘토링지원(30,000백만원): 6만명×0.5백만원(월 10만원×5개월)</u> 라. 대학운영비(54,000백만원) : 6만명×0.9백만원 마. 사업관리비(3,000백만원) : 1식×3,000백만원 바. 중앙현장실습지원센터(3,000백만원) : 1식×3,000백만원

자료: 교육부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는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현장실 습학기제는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학생이 전공 관련 산업현장에 서 실무를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이다.

2025년 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인원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31,518명(대 학 24,549명, 전문대학 6,969명),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980명(대학 2,762명, 전문대학 2,218명) 등 총 36,498명이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표준 현장실습학 기제 참여인원과 비교하면 2027년 목표인원 6만 명은 2025년 표준현장실습 총 참 여 인원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5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운영대학 수	이수 학생수
표준현장실습 ¹⁾	전체	256	31,518
	대학	146	24,549
	전문대학	110	6,969
자율 현장실습 ²⁾	전체	135	4,980
	대학	78	2,762
	전문대학	57	2,218

주: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

자료: 2026.9.11. 기준 대학정보공시(표준), 산학협력실태조사(자율)

특히 최근 4년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을 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 모두 이수학생 수와 실습기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이수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에도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총 참여인원은 37,997명으로 동 사업의 목표 인원 6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고지원에 따른 기업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초기 참여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습기관을 적극 발굴·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2022~2025)]

(단위: 개, 명)

구분	연도	참여대학 수	이수학생 수	실습기관 수
대학	2022	146	28,196	21,490
	2023	146	27,779	21,599
	2024	146	25,858	20,624
	2025	146	24,549	18,716
전문대학	2022	113	9,801	6,270
	2023	109	9,490	6,398
	2024	110	8,368	5,661
	2025	110	6,969	4,375

자료: 대학정보공시(2026.9.11. 기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6만명은 2025년 전체 대학 재학생 약 235.5만명의 2.5% 수준이고, 기존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의 국고 지원 사업이 없이 실질적으로 기업과 대학 부담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현장실

습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기업과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존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방학 중 단기과정도 운영되고 있었던 반면, 동 사업은 학생 6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며, 1인당 평균 실습기간 5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1인이 정규 학기과정의 4개월과 방학 중 1~2개월의 단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실습기간을 5개월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은 타 교과목 수강, 졸업요건 충족, 기타 자격시험 및 취업 준비 등 학생의 학사·진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평균 5개월간의 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 수요가 충분하지는 불확실하다. 2025년의 경우 전체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의 65.9%가 12주(약 3개월) 미만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별 이수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4주 미만	4주 이상 8주 미만	8주 이상 12주 미만	12주 이상	합계
표준	-	9,245	10,511	11,762	31,518
자율	238	2,667	1,388	687	4,980
전체	238	11,912	11,899	12,449	36,498
(비중)	(0.65)	(32.64)	(32.6)	(34.11)	(10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사업'³⁾은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형·프로젝트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교 재학생도 참여 대상이다.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는 정규 교육과정상 학점 인정이 되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미취업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사업 모두 현장 직무경험 제공을 통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3)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세부사업-내역사업	2027 예산안	내용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 (미래대응기금)	223,917 백만원	청년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 및 진로 설정, 직무역량 강화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학생과 기업의 참여 수요가 사업 간 분산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인원을 2025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실적 31,518명의 약 1.9배인 6만 명으로 산정하고 동시에 평균 실습기간을 5개월로 설정한 것은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인원 확대에 대비하여 대학별 참여 수요 및 실습기관 확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학별 집행실적에 따른 참여인원 조정 등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실습기관 확대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존 근로자 대체 및 단순반복 업무에 활용되지 않도록 실습 직무 및 실습조건에 관한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습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실습기관을 발굴·연계할 계획으로, 다수의 기업·기관이 현장실습에 새롭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습생이 교육계획과 무관한 단순·반복업무나 상시업무에 투입되거나, 실습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등이 준수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⁴⁾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하여 학생을 실습기관 소속 근로자의 대체·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기관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일상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직접적인 업무 체험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4) “‘교육? 착취?’ 인권침해 내몰린 대학생 현장실습”, 매일노동뉴스, 2025.11.12.

5)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① 각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 지급을 전제로 학생의 실제 직무수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고 지원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생을 기존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교육목적과 무관한 단순·반복업무를 주된 업무로 부과하는 것은 직무경험을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의 학생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지침에도 기존 근로자 대체 금지, 전공·교육과 무관한 일상 업무 및 단순·반복업무 제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과거 현장실습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⁶⁾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습현장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6) “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사망…농장주는 같은 학교 교수였다”, KBS 뉴스, 2025.6.4.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⁷⁾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⁸⁾

한편,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증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제출되었다. 이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④ (생략)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증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2026.8.25. 국무회의 의결

가. 현 황

지역균형발전장학금¹⁾ 사업은 지역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본예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비 2,480억 1,500만원(310.0%) 증액된 3,28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균형발전장학금	80,000	80,000	80,000	328,015	248,015	310.0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	-	-	213,015	순증	순증
지역인재장학금 ¹⁾	80,000	80,000	80,000	115,000	35,000	43.8

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고특회계) 중 지역인재장학금이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자료: 교육부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은 지방 국립대학 30개교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에 2,130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 학년을 확대할 예정이며,²⁾ 10구간을 포함한 모든 학자금 지원 구간의 학생을 지원하되, 의약학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³⁾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30

2) ('27) 1학년 → ('28) 1~2학년 → ('29) 1~3학년 → ('30) 1~4학년

3) 현행 국가장학금 사업과 동일하게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②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 등 적용

[2027년도 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계획안 산출 세부 내역]

재원		비고
지방 국립대 1학년 등록금 총액 (2,677억)	교내장학금 부담분	△268억
	성적 탈락 등 수혜요건 미충족	△279억
	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2,130억

주: 기존 지방 국립대학 재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분(1,204억 원) 이관 고려 시, 실제 추가 소요는 926억 원임

자료: 교육부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지원대상 30개교]

거점국립대 (9개교)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일반국립대 (12개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원양성대 (9개교)	한국교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자료: 교육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 사립대학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수준을 지원하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는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⁴⁾ 2027년도 계획안에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인재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지방 사립대 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350억원 확대된 1,150억원이 편성되었다.

4) 지역인재장학금 예산 : ('14~'16) 연간 1천억원 → ('17~'26) 연간 800억 원

[지역균형발전장학금 개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②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 (재원) 미래대응기금 : '27년 3,280억 원 편성(①2,130억 원 ②1,150억 원)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은 지원 학년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지원 개시 이후 축소·중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부담 및 재원 확보 방안, 다른 교육재정 수요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기존 국가장학금과 달리, 지역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⁵⁾ 교육부는 특히 국가가 설립한 기관으로서의 지방 국립대학의 특수성, 지원 책무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설명이다.

동 사업은 2027년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등록금 지원 대상 학년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재정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이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4학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2030년부터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에 연간 약 7,51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대상의 연차적 확대에 따른 향후 투입 예산]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13,015	381,854	550,694	751,661

주: 2026~2030 중기재정계획에는 미반영

자료: 교육부

특히 동 사업의 향후 소요예산은 2026~2030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 바,⁶⁾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 여부 및 재원 조달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수반하며, 지원 개시 이후에는 학생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축소·중단이 어려울 수 있는바,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교육재정 수요와의 우선순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록금 추가지원과 중도 이탈 시 환수 조치의 주요 대상이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이 높은 학생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실제 등록과 중도 이탈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인재 유치 및 이탈 방지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중도 이탈⁷⁾ 시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① 기 이수 학기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고, ② 당해 학기의 경우 현행 반환 기준(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⁸⁾

6) 교육부는 2026~2030 중기사업계획 수립 당시 국가장학금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7) 전액 장학금 지원 조건(졸업) 이행 전, 자퇴·제적 등에 따른 해당 대학 학생 신분 상실

8) (예) 기초·차상위(I 유형 전액 지원) → ‘0원’, 10구간(I 유형 미지원) → ‘등록금 전액’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추가지원금” 지원 구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단가		+	추가 지원금
지원 단가	600만원					
		440만원				
			360만원			
				100만원		
구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	

자료: 교육부

전액 장학금의 지급을 통해 지방 국립대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면제와 반환의 부담이 재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추가 지원금” 주요 수혜 대상인 학자금 지원 7~10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⁹⁾ 130%인 약 월 844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해당하며, 특히 기존 국가장학금 I 유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0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월 1,948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가구이다.

이처럼 중도 이탈 시 환수 대상인 추가지원금의 주요 수혜대상이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은 구간의 학생에게 집중되는 구조인바, 전액 장학금 및 추가지원금 환수조치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중도 이탈 방지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
수급 자격에 따름	70% 이하 (월 65만원 이하)	70~130% 이하 (455~844만원)	130~200% (844~1,299만원)	200~300% (1,299~1,948만원)	300% 초과 (1,948만원 초과)

주: 1.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함

2. 2027년 1학기부터 1~3구간은 “가”구간으로,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구간으로 개편 예정

자료: 한국장학재단

- 9)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한편, 진학사가 2027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에 지원한 수험생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을 계기로 지원 우선순위를 높였다’는 응답이 21.3%,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정책의 영향으로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는 응답도 11.8%이었던 반면, ‘등록금 0원 정책은 알고 있지만 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54.1%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수험생의 지원 결정에 미친 영향일 뿐, 실제 지방국립대 유입 효과나 재학생의 중도탈락 방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해당 대학 지원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단위: 명, %)

응답	응답인원	비율
해당 정책을 계기로 지방국립대 지원 우선순위를 높였다	322	21.3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정책의 영향으로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179	11.8
원래 계획보다 지방국립대 지원 대학 수를 늘렸다	137	9.1
정책을 알고 있었지만 지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817	54.1
해당 정책을 알지 못했다	56	3.7
계	1,511	100.0

주: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에 지원했다고 응답한 수험생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진학사 설문조사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 학생의 실제 등록 및 중도 이탈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지역 인재 유치 및 중도 이탈 방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국립대에 대한 장학금 확대가 수도권 대학 진학 예정자의 지역 유입보다 지방 사립대 진학 예정자의 이동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학생 이동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의 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 ‘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면서 지방 사립대학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지역인재장학금’ 제도를 개편하였는바, 기존의 고교 출신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신규 선발 인원도 현행 약 4,3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도 계획안에는 지역인재장학금 1,150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인재장학금 2027년 계획안]

예산	산출내역
115,000백만원	○ 사업 출연금(350-02) : 115,000백만원 - 기선발 계속 장학생 지원분 350억원 - 신규 선발 장학생 지원분 800억원 (1만명x800만원(등록금 지원 한도))

자료: 교육부

그러나 지방 국립대 학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 사립대는 우수학생 일부를 선발하여 6구간 이하에는 전 학기, 7~9구간에는 2년간 연간 최대 800만원¹⁰⁾을 지원하므로 수혜 범위와 지원 기간에 차이가 있다. 국립대 육성 취지에서 차등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국립대 지원 증가가 수도권 진학 예정자의 지역 유입보다 지방 사립대 진학 예정자의 이동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지역 전체의 인재 유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사립대의 충원 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지방거점국립대와 일반 지방 국립대 지원자는 전년대비 각각 5.2%, 12.6% 증가한 반면, 지방 사립대는 0.5%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사립대학교는 지원자가 정체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권 대학 수시 모집 지원자 및 경쟁률(2025~2027)]

(단위: 명, %, 대 1)

연도	대학	수시 모집인원	지원자 (전년대비 증가율)	경쟁률
2025학년도	지방거점국립대	31,712	267,624	8.44
	지방국립대	21,006	126,568	6.03
	지방사립대	108,706	566,030	5.21
2026학년도	지방거점국립대	32,389	280,248 (4.7)	8.65
	지방국립대	21,296	137,116 (8.3)	6.44
	지방사립대	110,640	636,281 (12.4)	5.75
2027학년도	지방거점국립대	32,910	294,725 (5.2)	8.96
	지방국립대	21,570	154,424 (12.6)	7.16
	지방사립대	110,268	639,285 (0.5)	5.80

주: 지방거점국립대 9곳, 지방 국립대 12곳, 지방 사립대 65곳 기준

자료: 종로학원

10) 지방 사립대학 '26년 평균 등록금(4년제 787만원, 전문대 635만원) 고려

따라서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 효과와 지방대학 간 학생 이동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에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대학의 충원 여건과 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의 법적 기반 및 중기 투자·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¹⁾ 사업은 지방 국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대학별 발전방향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6,9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	-	-	691,000	순증	순증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	-	-	691,000	순증	순증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국정과제 (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학(21교)을 대상으로 지방 국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의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 21교]

거점국립대 (9개교)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일반국립대 (12개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자료: 교육부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40

나. 분석의견

첫째, 미래인재성장자금의 핵심 운영방식인 다년도 적립과 대학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은 ① 세부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총액 교부, ② 교육부-대학 간 성과계약 및 그 결과에 기반한 예산 차등 배분, ③ 다년도 이월·적립 허용, ④ 해당연도 미집행 시 반납이 아닌 자발적 투자·증자기 사용(대학자체 기금 조성)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금을 다년도에 걸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2026년 10월 기준 교육부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

법령명	개정 필요 내용	추진 일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재원의 증자기 운용을 위해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회계에 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정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재정위원회 구성 개선 포함(위원 정수 확대 및 외부 인사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	'27.상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 재원은 대학회계 내 별도 관리하고,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이·전용 등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6.하

주: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재원 운용(이·전용, 이체 등)의 자율성을 명문화하고 대학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원금의 적립 및 대학 자체기금 조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대학의 증자기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법률 개정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초 연도 이후의 투자 규모와 대학별 배분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대학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학별 투자 수요를 반영한 중기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과의 성과계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²⁾에 따라 자율 제시를 토대로 총액을 지원하되, 사업 1년차(2027년)에는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2~3년 차부터는 기관 단위의 성과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 6,9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30년까지 매년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나, 2027년 이후의 투자계획(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1년차 이후부터의 연도별 투자 규모와 차등 배분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학이 가용 재원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장기 투자계획과 이에 상응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 등의 중장기 자본투자나 R&D 등 장기협력 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향후 지원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2027년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계획안]

예산	산출내역
691,0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691,000백만원 가. 대학지원(690,000백만원) · (거점국립대) 9교 × 평균 50,000백만원 = 450,000백만원 · (일반 지방국립대) 12교 × 평균 20,000백만원 = 240,000백만원 나. 성과관리(1,000백만원)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서 거점국립대학(9교)에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학(12교)에 평균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³⁾ 다만, 대학별

2) 대학별 기존 발전계획을 활용·보완하거나, 미래인재성장자금의 지원 취지, 대학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수립하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수립 가능

중장기 발전계획과 성과계약의 내용,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연도별 필요 재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안에 따른 지원 규모가 대학별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이를 중기 투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중기 재정지원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대학별 중장기 투자 수요와 과제별 소요 재원을 검토하여 연도별 투자 규모를 포함한 중기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금의 폭넓은 사용과 장기 적립을 허용하면 실제 투자가 지연되거나 사업 종료 후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이월·적립금 활용과 성과계약 이행 및 잔여 재원 처리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인재성장자금은 다년도 이월·적립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 네거티브를 제외한 교원 인건비(인센티브) 및 시설비, 경상경비 등에도 집행을 폭넓게 허용하여 대학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투자가 가능하다.⁴⁾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 성과관리위원회 운영⁵⁾, 성과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등 동 사업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엄정한 사전·사후 성과관리 실시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용 시나리오(예시)에는 “중장기 재정안정성을 위한 대학자체기금 조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금의 사용 목적에 자체기금 조성까지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장기간 적립된 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거나 사업 종료 이후 성과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립대육성, '27 정부안 기준) 거점대 평균 361.33억원, 일반국립대 평균 87.73억원 지원 (성장엔진 연계 패키지지원, '27 정부안 기준) 거점대 3교 평균 800억원 지원

4)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 이월은 15% 이내('25년 기준) 가능하며 적립은 불가, 교원 인건비(인센티브) 및 시설비 집행 불가, 경상경비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 가능

5) 구체적인 위원 구성 및 운영 주체(교육부, 전문기관 등) 등은 사업계획을 통해 마련 예정('27.상)

[사용 시나리오(예시)]

- ▶ (교원) 우수교원 정착지원금, 스타트업 펀드형 초기연구비 패키지
- ▶ (학생) 우수학생 수당 지원, 해외경험 지원,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등
- ▶ (인프라) 공동연구시설, AI컴퓨팅 자원 등 중장기 자본 투자
- ▶ (산학) 지역 앵커기업과 공동 R&D 지분 참여형 장기협력 사업 등
- ▶ (기금)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학자체기금 조성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의 지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운용 기간, 이월·적립금의 활용계획 및 운용현황 보고, 성과계약의 이행 점검, 사업 종료 후 잔여 재원의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바,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⁶⁾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⁷⁾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④ (생략)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7) 2026.8.25. 국무회의 의결

같은 법 제38조제5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증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제출되었다. 이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¹⁾은 전략산업·학 교별 특성화 등 분야에 맞춰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 특화 연구·실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비용 문제로 개별 대학이 도입하기 어려운 첨 단·대형 연구 장비와 대학 특화 교육·R&D 실증 인프라 등 구축, 기업·대학 간 공 동 활용 등을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으로 2027년도 단년도 사업이며, 계 획안에는 6,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	-	-	600,000	순증	순증

자료: 교육부

지원대상은 지역별 전략산업, 대학별 특성화·강점 분야 등 관련 이공계 학과가 있는 지역 우수 사립대(일반·전문대)이며, 공모 절차를 통해 약 40개교를 선정한 후 교당 150억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사립대학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용자사업과 연구장비 구축·공동활용 R&D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적정 지원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80

교육부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및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첨단분야 실험·실습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현장의 정부 재정지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일부 내용으로 하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부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학진흥기금)²⁾ 사업은 사립대학의 AI·첨단분야 인프라 투자 및 지·산·학 협력, 선제적 구조개선 등 재정 안정화 및 교육안전·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24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세부 사업 중 ‘혁신선도 용자’의 경우 고등교육(연구) 발전과 신산업(AI·바이오·방산·에너지 등) 및 정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분야 혁신·선도를 위한 장기·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고 있어, 이공분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추진 방식(직접지원·용자)이 다를 뿐 지원 대상과 투자 용도가 유사하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

사업 종류	세부 사업	세부 내용
① 정책지원 용자	① 혁신선도 용자	- 고등교육(연구) 발전과 신산업(AI·바이오·방산·에너지 등) 및 정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분야 혁신·선도를 위한 장기·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
	② 지역발전 용자	- 학교 소재 지역과의 상생,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지·산·학) 간의 연계·협력 사업
	③ 구조개선 용자	- 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경영을 위한 적정규모화, 수입 확대 및 비용 절감 등 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시설·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사업 등
② 환경개선 용자		- 사학기관 교육환경(노후시설)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확충, 일반운영비 등 사업

자료: 교육부

2) 코드: 사학진흥기금 2861-300

또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R&D)³⁾ 사업은 이공계 분야 첨단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 기능 측면에서 유사하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연구기반구축 중 ‘기초인프라지원’은 2027년도 계획안에 36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학 내 연구장비를 학문분야별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에 집적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최첨단 R&D 장비 구축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⁴⁾

[사립대학 이공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 관련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7 계획안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첨단·대형 연구 장비와 대학 특화 교육·R&D 실증 인프라 등 구축, 기업·대학 간 공동 활용 등 지원	600,000	직접 지원 (공모)	사립대학 (일반대 ·전문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립대학의 AI·첨단분야 인프라 투자 및 지·산·학 협력, 선제적 구조 개선 등 재정 안정화 및 교육안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124,890	융자 (사학진흥 자금)	사립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이공학학술연구 기반(R&D) (대학연구기반구축 - 기초인프라지원)	대학이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공동활용시설 중심의 재정 지원	36,241	과제 공모	이공분야 대학 및 연구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부는 동 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지원 목적·방식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⁵⁾ 인프라 지원 관련 사업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기존 사업으로

3)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60

4) 이 외에도 일반 사립대와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일반재정 지원 사업이 있는바, 일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 일반재정지원 7,315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850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또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 일반재정지원 5,277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5) ①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은 연구조직(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R&D 장비의 집적화 및 전문적 운영체계(운영인력 양성) 구축 등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충당하기 어려운 인프라 수요를 확인하고, 지원 분야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은 대학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신규 인프라 지원대상 선정 시 ZEUS의 장비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존 장비의 이용 여건을 검토하고, 공동 활용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를 중심으로 신규 구축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유대학 등 다른 사업에서도 시설·장비 구축과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규 지원대상 선정 시 기존 인프라의 이용 가능성과 향후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중복 구축을 방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전략산업·학교별 특성화 등 분야에 맞춰 사립대학 이공계 특화 연구·실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구축 인프라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실험실습·R&D 기자재 구축	개별 단독 투자가 어려운 대형·고가 실험실습 및 R&D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구축
실험실습장비 고도화	최신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첨단 R&D 및 실험실습이 가능하도록 노후 시설·기자재 전면 개선
인프라 공동활용	대학 내 고도화된 실습실·기자재를 대학, 기업 등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시너지 제고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중에는 동 사업과 유사하게 대학의 인프라 구축과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들이 다수 있다.

주목적임

- ②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사업 지원 유형(5개) 중 첨단분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선도 융자’뿐인데, 해당 유형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부족하고, 2026년 지원받은 2교(중앙대, 서정대)도 실험실습·연구를 위한 장비·기자재가 아닌 시설 신·증축 공사를 위해 융자 지원 받음

①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⁶⁾ 사업 중 ‘첨단분야 공유대학’은 개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첨단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간 공유를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자체 구축한 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 등을 다른 대학과 공유하여 실습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첨단분야 공유대학 실습 인프라 공유 사례]

[차세대 반도체] (수도권)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 (비수도권)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으로 공정교육체계를 이원화하여 실습 인프라 공유 ⇒ 강원대, 대구대, 중앙대 등 학생 수강
[미래자동차] 충북대 자율주행 실차시험이 가능한 대학 최고수준의 인프라(C-Track)를 컨소시엄 내 참여대학 학생들이 문제해결형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그린바이오] (지역거점대)충남대(실증 Hub)-(수도권)서울대(연구 Hub)-(전문대학)연암대(실습 Hub)의 Hybrid Hub Network 구축과 함께 순환형 교육 인프라 플랫폼 운영(물적/인적자원 공유·개방)
 ⇒ 계절학기를 활용하여 K-스마트팜 신기술 실증실용화 기술 밸리 구축(연암대[지방])

자료: 교육부

②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5극3특 공유대학’ 역시 9개 거점대를 중심으로 구축한 자원과 인프라를 타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등과 공유·협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실험·실습 및 연구 인프라 개방·공유 등 대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6)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01-401

[5극3특 공유대학 주요 추진과제]

공동교육	성장엔진·AI 분야뿐만 아니라 교양교육, 기초학문, 창업교육 등까지 제공해 지역 학생의 역량 제고 촉진 - 성장엔진·AI 분야에서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필수화하고, 이수자에 대한 기업 공동 인증체계 도입
공동 R&D	지역대학 교원, 석·박사생 등이 특성화 융합연구원 등 거점국립대의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 성과 융복합으로 중대형 기술이전 등 상용화
자원 공유	고가 실험·실습 기자재 등 거점국립대에 확충되는 시설·장비·공간 등을 지역 대학에 개방·공유·활용
인적교류	점임·겸직, 파견, 연구연가 등 제도를 활용한 지역 대학 간 교원 교류 활성화
실무인력 양성 협력	성장엔진 산업의 다층적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 폴리텍 등 실무인력 양성 기관과의 협력 추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③ 사립대의 인프라 수요조사 결과 반도체 분야의 교육·실습 및 R&D 장비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⁷⁾ 사업의 내역사업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대학의 특화 공정 교육체계를 연계하여 반도체 전 공정을 실습·교육할 수 있는 연합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 대학 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반도체 장비 구축 지원 시 반도체공동연구소의 교육·실습 프로그램과 장비 활용 가능성 및 향후 공정별 장비 구축 계획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립대학의 실험실습연구를 위한 신규 인프라 지원 대상 선정 시 타 사업의 공유대학 컨소시엄이나 거점국립대에 구축된 기존 인프라 이용 가능성과 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대학 인프라 구축 사업 간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 이전에

7)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50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바,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⁸⁾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⁹⁾

한편,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제출되었다. 이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④ (생략)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9) 2026.8.25. 국무회의 의결



국가교육위원회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없으며,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16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00만원(2.9%)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9,184	11,313	11,644	331	2.9
- 일반회계	9,184	11,313	11,644	331	2.9
합 계	9,184	11,313	11,644	331	2.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7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총 7건으로 법정회의 등 운영,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교육정책 숙의·조정,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로 구성된다.

이 중 사업비 성격의 세부사업은 총 4건으로 법정회의 등 운영,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교육정책 숙의·조정이 해당되며, 2026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1개의 세부사업을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4개로 분리 편성한 데 기인한다. 사업비 성격의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6백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2026년 46억 2,100만원 → 2027년 46억 2,700만원), 이는 ① 지출구조 조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반영하여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및 정책연구 예산과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예산의 폐지 등 총 17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및 실질적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정책 숙의조정 사업을 신설하여 총 1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6개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조 6,85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046억원(12.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411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6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8,40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조 4,45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05억원, 언론진흥기금 333억원, 영화발전기금 368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4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61,879	170,202	170,202	179,201	8,999	5.3
- 일반회계	133,302	134,949	134,949	141,142	6,193	4.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2,515	6,440	6,440	6,511	71	1.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62	28,813	28,813	31,548	2,735	9.5
기 금	3,611,816	4,010,664	4,010,664	4,506,250	495,586	12.4
- 관광진흥개발기금	1,208,835	1,390,170	1,390,170	1,840,179	450,009	32.4
- 국민체육진흥기금	2,260,744	2,456,422	2,456,422	2,445,038	△11,384	△0.5
- 문화예술진흥기금	82,729	93,623	93,623	150,469	56,846	60.7
- 언론진흥기금	34,484	33,335	33,335	33,335	-	-
- 영화발전기금	24,522	36,727	36,727	36,839	112	0.3
- 지역신문발전기금	502	387	387	390	3	0.8
합 계	3,773,695	4,180,866	4,180,866	4,685,451	504,585	12.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9조 6,34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3,156억원(15.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134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7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3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2,75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8,50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176억원, 언론진흥기금 162억원, 영화발전기금 1,143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23억원, 미래대응기금 9,843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838,386	4,276,311	4,316,519	4,763,876	447,357	10.4
- 일반회계	3,266,786	3,668,103	3,699,619	4,013,441	313,822	8.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15,592	115,151	115,151	107,214	△7,937	△6.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6,008	493,057	501,749	643,221	141,472	28.2
기 금	3,284,053	3,579,236	4,002,394	4,870,663	868,269	21.7
- 관광진흥개발기금	1,138,056	1,198,242	1,460,285	1,275,220	△185,065	△12.7
- 국민체육진흥기금	1,561,395	1,709,852	1,733,062	1,850,737	117,675	6.8
- 문화예술진흥기금	462,906	539,352	611,667	617,586	5,919	1.0
- 언론진흥기금	20,720	17,979	17,979	16,187	△1,792	△10.0
- 영화발전기금	92,280	101,506	167,096	114,327	△52,769	△31.6
- 지역신문발전기금	8,696	12,305	12,305	12,298	△7	△0.1
- (미래대응기금)	-	-	-	984,308	984,308	순증
합 계	7,122,439	7,855,547	8,318,913	9,634,539	1,315,626	15.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80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억원(0.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11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8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5억원이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3,302	134,949	134,949	141,142	6,193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37,147	116,089	116,089	108,135	△7,954	△6.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62	28,813	28,813	31,548	2,735	9.5
합 계	296,511	279,851	279,851	280,825	974	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8,663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33억원(9.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1,150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8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32억원이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409,253	3,803,656	3,835,172	4,114,983	279,811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16,334	116,089	116,089	108,135	△7,954	△6.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6,008	493,057	501,749	643,221	141,472	28.2
합 계	3,981,595	4,412,802	4,453,010	4,866,339	413,329	9.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래 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조 6,528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1조 38억원(15.1%)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2조 3,426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 3,85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019억원, 언론진흥기금 595억원, 영화발전기금 1,643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43억원, 미래대응기금 9,843억원이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관광진흥개발기금	1,342,722	1,839,942	2,100,057	2,342,620	242,563	11.6
국민체육진흥기금	2,928,370	3,459,040	3,580,155	3,385,888	△194,267	△5.4
문화예술진흥기금	529,336	632,549	684,864	701,906	17,042	2.5
언론진흥기금	82,459	54,506	54,506	59,488	4,982	9.1
영화발전기금	102,198	169,556	215,146	164,324	△50,822	△23.6
지역신문발전기금	13,026	14,965	14,266	14,257	△9	△0.1
(미래대응기금)	-	-	-	984,308	984,308	순증
합 계	4,998,111	6,170,558	6,648,994	7,652,791	1,003,797	15.1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641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75억원이 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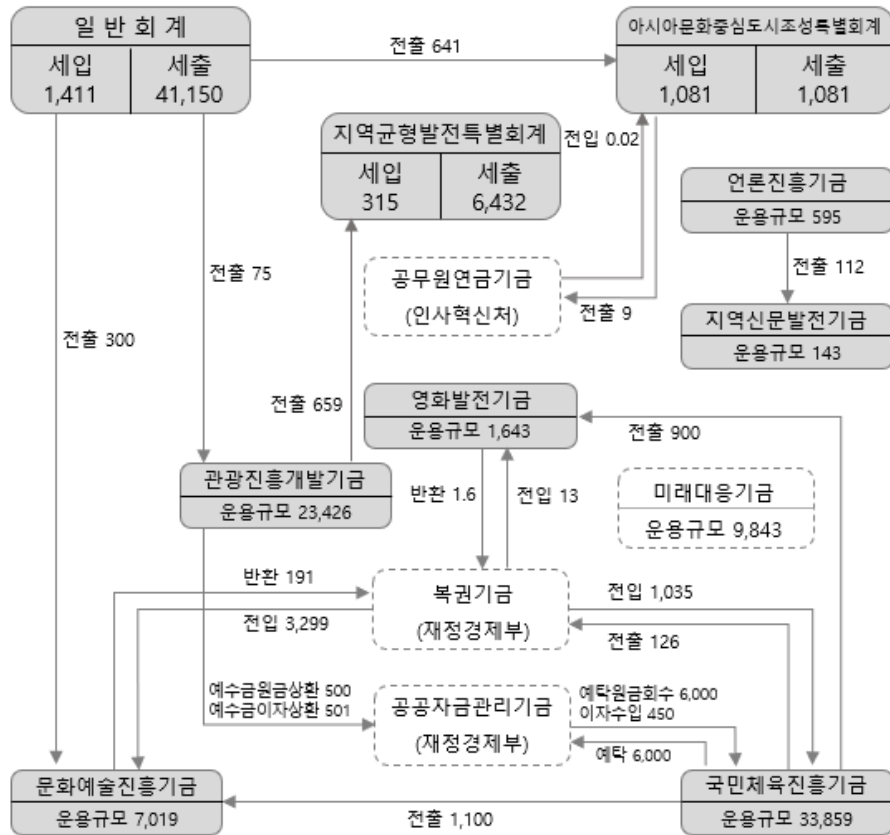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9억원을 전출하면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2백만원을 전입받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100억원, 영화발전기금으로 900억원을 각각 전출하며, 복권기금으로 126억원을 전출하면서 복권기금으로부터 1,035억원을 전입받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00억원을 예탁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을 회수하고 이자 수입 450억원을 받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659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500억원 및 예수이자 501억원을 상환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복권기금으로 191억원을 반환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3,299억원을 전입받으며, 언론진흥기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112억원을 전출한다. 영화발전기금은 복권기금으로 1.6억원을 반환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13억원을 전입받는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을 19~20세에서 34세까지 늘려,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2026년 361억원 → 2027년 7,925억원), ②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대출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업 용자 지원을 신설(2027년 100억원)하는 한편, 글로벌 메가 IP 창출을 위한 정책 펀드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며(2026년 4,300억원 → 2027년 6,030억원), ③ 기존 사업 재구조화·확대 개편을 통해, 방한객의 지방입국의 관문이 되는 지방공항을 통해 이동·소비·체류가 연결되는 ‘연계도시’를 잇는 메가관광권 육성 사업을 신설하였고(2027년 659억원), ④ 유·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강화(2026년 55억원(10개 종목) → 2027년 424억원(36개 종목)), 디비전리그 운영 확대(2026년 274억원 → 2027년 470억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2026년 57억원(8만명) → 93억원(16만명)) 등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청년대회는 참가 규모 및 개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천주교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다각적 협력 및 지원이 요구되므로 재난·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 관련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으로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서 예술교육 파행 및 예술인 생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복원 및 강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므로, 문체부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가관광권 사업은 대규모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는 사업 구조상 지자체의 재원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지연 및 예산 불용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재원 조달 협의와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84개 사업, 2조 6,645억원 규모이다. 기존 사업의 분리 등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사업 중 ‘문화체육분야 암표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문화체육분야 암표·사재기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은 방한객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외래객 지역 방문과 국민의 지역 관광 확대를 초광역 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청년 대상 공연·전시·영화 분야 등에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1개)	10.27 법난기념관 건립	9,300
	K-문화기술 글로벌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범사업	3,200
	디자이너 패션산업 육성	10,906
	콘텐츠IP산업 육성	8,27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25,500
	만화·웹툰 산업 육성	29,475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트 구축	7,800
	콘텐츠기업 융자지원 시범사업	10,000
	전통의 재가치화를 통한 K-뮤지엄 선도 기술개발(R&D)	6,200
	K-컬처 라이브 공연향유 경험혁신 기술개발(R&D)	25,000
	AI 저작권 신퇴 거버넌스 기술개발(R&D)	3,127
	방송영상콘텐츠 창제작 지원	13,5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7,878
	세종학당 온라인 통합학습플랫폼 구축 및 운영(정보화)	4,464
	한국문화원형 체험 전시관 건립	5,117
	K-헤리티지 밸리 조성	5,370
	공예문화산업 진흥지원	16,30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887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국악방송 지원	13,892
	공연예술 공간 지원 및 데이터 관리	5,865
	전통예술 지원 및 저변확대	6,993
	K-뮤지컬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20,781
	공연·전시 유통지원	112,844
	문학관 운영 활성화	4,276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고도화(정보화)	600
	공공디자인 및 건축문화 진흥	5,760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	52,981
	통합미술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88
	지역 문화인프라 개선 지원	1,500
	우리동네 문화이음	850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29,855
	국립중앙도서관 인력운영	18,225
	국립국악원 분원건립	4,041
	KTV 정책소통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25,928
	국제문화교류확산지원	20,245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7,893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32,957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	13,550
	한류 연관산업 지원	36,800
	해외문화거점 사업 지원	68,113
	문화체육분야 압표 모니터링 시범사업	4,00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특 별회계 (1개)	아시아문화전당 안전 및 이용환경 개선 시범사업	7,892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 (4개)	문화선도산단 지원	7,200
	원도심 중심 지역문화 성장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	4,900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세종)	100
	메가 관광권 조성	65,912
관광진흥 개발기금 (2개)	관광산업 활성화 펀드	48,000
	국민여행 활성화	106,437
국민체육 진흥기금 (32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1,241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42,41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50,622
	스포츠클럽 육성	19,746
	디비전리그 운영	47,002
	생활체육 대회 지원 및 정보제공	3,883
	학교체육 및 학교·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20,594
	심판 양성 및 지원	28,674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진흥 지원	16,358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 분야	23,924
	국가대표 훈련지원	78,776
	국가대표 유망선수 육성	38,215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57,101
	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2,072
	프로스포츠 활성화	45,116
	유소년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46,848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41,583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동사업 지원	28,450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구축	200
	올림픽 기반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	10,717
	스포츠·공연 복합형 돐구장 건립	490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4,582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운영	4,854
	성장 단계별 스포츠기업 육성지원	23,757
	스포츠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298
	스포츠기업 일자리 지원	3,000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8,350
	지역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7,093
	스포츠분야 암표신고센터 운영	500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40,239
	장애인 국제체육 지원	7,984
	도박문제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425
문화예술 진흥기금 (1개)	뉴서울CC골프장운영	28,692
미래대응기금 (3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39,500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27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152,281
합 계		2,664,4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종교문화활동지원,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국민문화활동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이 있다.

① 종교문화활동지원 사업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운영, 참가자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산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공직자통합메일 클라우드 전환 및 AI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③ 국민문화활동지원 사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축제 연계 지역콘텐츠 활성화 신규 사업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안이 대폭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개)	종교문화활동지원	22,805	22,805	42,675	19,870	87.1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43,238	43,238	58,959	15,721	36.4
	K-콘텐츠펀드 출자	430,000	455,000	603,000	148,000	32.5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기술개발(R&D)	9,275	9,275	13,100	3,825	41.2
	저작권 및 AI 산업 상생협력 지원	2,000	2,000	4,000	2,000	100.0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7,655	7,655	11,403	3,748	49.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5,139	75,139	101,135	25,996	34.6
	예술의전당 지원	17,470	17,470	43,108	25,638	146.8
	예술인장작안전망구축	89,022	89,722	115,967	26,245	29.3
	한국문학번역원지원	24,949	24,949	34,384	9,435	37.8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3,960	3,960	16,829	12,869	324.9
	국립중앙박물관운영	84,445	85,069	106,429	21,360	25.1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1,966	1,966	14,000	12,034	612.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	3,500	3,500	25,000	21,500	614.3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확장 건립	715	715	1,785	1,070	149.7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건립	255	255	2,070	1,815	711.8
	미디어홍보	16,899	16,899	25,464	8,565	50.7
	국제문화정책지원	5,550	5,550	16,250	10,700	192.8
	유네스코 협력(ODA)	123	123	483	360	292.7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1,263	1,263	1,913	650	51.5
	관광외교역량강화(ODA)	443	443	613	170	38.4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 (ODA)	486	486	2,035	1,549	318.7
	한글박물관 복구	4,000	4,000	10,500	6,500	162.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 경비(정보화)	922	922	2,355	1,433	155.4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750	750	1,022	272	36.3
문화체육관광 중심사업 특별회계 (1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99	399	560	161	40.4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2개)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6,238	37,078	10,840	41.3
	관광자원 기반조성	10,597	10,597	16,235	5,638	53.2
관광진흥 개발기금 (2개)	AI 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 (R&D)	3,750	3,750	5,000	1,250	33.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92,674	488,365	901,346	412,981	84.6
국민체육 진흥기금 (5개)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12,212	118,422	137,531	19,109	16.1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95,277	95,277	255,753	160,476	168.4
	국립체육박물관건립	5,580	5,580	7,596	2,016	36.1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 (R&D)	5,725	5,725	7,980	2,255	39.4
	도핑방지활동지원	10,283	10,283	14,094	3,811	37.1
문화예술 진흥기금 (3개)	예술창작지원	69,118	71,118	91,701	20,583	28.9
	예술인력육성	23,897	27,332	36,066	8,734	32.0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2,051	2,051	5,375	3,324	162.1
영화발전 기금 (2개)	영화유통 지원	17,501	17,501	23,466	5,965	34.1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707	1,707	2,590	883	51.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준비 및 지원단 설치예산 반영 필요

가. 현 황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¹⁾은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 까지 개최되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3억 5,000만원이 증액 된 23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종교문화활동지원	19,770	22,805	22,805	42,675	19,870	87.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700	3,000	3,000	23,350	20,350	678.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청년 순례 및 친교의 장으로, 약 3년마다 열리며, 통상 7~8월에 일주일 가량 개최 되는 경우가 많았고, 교황이 직접 선정한 개최지에서 진행된다. 2027년에는 대한민국 서울(본대회) 및 15개 지역교구(교구대회)에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 될 예정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요]

-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Seoul 2027) 개요 〉
- (기간) '27. 7. 29. ~ 8. 8. / 본대회(5박 6일), 교구대회(4박 5일)
 - (장소) 서울(본대회) 및 15개 지역교구(교구대회)
 - (참가) 해외 40만여 명 포함 최대 100만여 명 예상
 - (주요내용) 전 세계 청년(15~39세 중심)이 상호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이해 및 평화증진을 도모하는 국제행사(개·폐막미사, 교황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등)
 - (주최/주관) 로마 교황청 / 천주교 서울대교구((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세계청년대회는 참가 규모 및 개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천주교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다각적 협력 및 지원이 요구되므로 재난·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비(非)가톨릭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대회로, 참가자 규모로 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마이스관광학회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대회 참가인원은 최대 100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3.15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대회 참가인원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70~100만 명	2.07~3.15조 원	0.91~1.37조 원	1.1~1.6만 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25년

정부의 대회 지원 기본 방향은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 출입국, 교통 등 공공서비스 및 국가이미지 제고(문화행사·홍보) 등 간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체부는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관 운영,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취재 및 홍보 지원, 위생관리, 보건·의료 및 안전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2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안)
통합 홍보	대회 홍보 및 국가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영상, 인쇄물 제작, 홍보관 운영 등)	2,000
미디어센터	프레스센터 구축·운영	6,500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공연·예술 페스티벌(K-POP 콘서트 1,250) 전통문화프로그램(민속놀이, 한식체험 3,600)	4,850
공공서비스	위생관리(이동식 화장실·음용수 스테이션 운영 등 4,000), 보건·의료 대응(임시의료소, 의약품·의료소모품 지원, 감염병 예방 방역 2,000), 안전 대응(대규모 인파 안전펜스·바리케이드 임차·설치, 운영 인력 등 4,000)	10,000
합계		23,3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천주교 측 총예산은 2,700억원대로 추산되며, 이 중 국비는 2027년 예산안 포함 270억 5,000만원이다.

[대회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700	3,000	23,350	27,050
자체재원	4,160	25,720	215,920	245,800
합 계	4,860	28,720	239,270	272,8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특정 종교의 행사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예상되는 참가 규모 및 개최 효과를 고려할 때,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재난·안전 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사업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개최 시기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회가 열리는 시기(7. 29. ~ 8. 8.)는 통상적으로 혹서기에 해당하여 전국적인 폭염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나 도보 순례 등의 행사 특성상,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밀집 인파 속에서 온열질환자를 비롯한 다수의 응급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보건·의료 대응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현장 임시의료소 확충, 충분한 의료진 및 구급차 배치, 신속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본대회 주요행사 장소(안)]

구분		올림픽공원	광화문광장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대	상암 월드컵경기장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424	종로구 세종대로 172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마포구 월드컵로 240
주요행사		밤샘기도, 폐막미사	문화 행사	개막미사, 교황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개막미사
수용 인원	앉는기준 (0.6㎡)	약 96만 명	약 12만 명	약 72만 명	약 49만 명
	서는기준 (0.33㎡)	약 171만 명	약 22만 명	약 132만 명	약 83만 명
	눕는기준 (2.0㎡)	약 27만 명	약 4만 명	약 22만 명	약 13만 명

자료: KDI,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둘째, 타 국제행사와의 일정 중복을 고려하여 출입국 및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본 대회 기간은 충청권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2027. 8. 1. ~ 8. 12.)'와 일정이 상당 부분 겹친다. 두 개의 대규모 국제행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 및 관광객이 급증하여 공항 마비나 교통 체증 등 국가 인프라의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입국 심사 인력 증원 및 전용 창구 운영, 행사장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특별 수송 대책 등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부처 간의 범정부적인 협력 컨트롤타워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27년 예산안에 지원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 (기 간) '26. 9. 3. ~ '27. 10. 31.
- (구 성) 지원단장(문체부 종무실장 겸임), 부단장(문체부 고위공무원단), 국조실, 행안부, 복지부, 외교부, 문체부 등 부처 파견 및 문체부 재배치 공무원으로 구성
- * (근거) 국무총리 훈령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6. 9. 3.)
- (주요 기능) ▲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안전·수송·의료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협력 및 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동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원단 사무실 임차 및 운영,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제반 수용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 운영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소요예산
운영비	○ 일반수용비 -관계부처 합동 실무회의, 분야별 협의체, 현장 점검, 정부종합 상황실 운영, 사무경비 등	222
	○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클라우드 사용료, 통신요금	8
	○ 특근매식비	27
	○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공용차량 및 사무기기, 전산장비 임차료, 상황 반 장비 임차료	848
	○ 사무실 조성비 -내부 인테리어, 전산·통신 인프라 구축, 통신(인터넷·전화) 설 치비 등	59
	○ 차량유지비-유류비	2
	○ 부서운영비	5
	○ 국내 출장여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현장점검	121
여비	○ 국외 출장여비-교황청 협의지원	66
	○ 대회 개최지원 업무협의, 외신 업무협의, 자문단 운영, 상황반 운영	115
사업추진비		
인건비	○ 보조인력(국장 비서)	27
합계		1,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청년대회는 다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이견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국가적 행사이다. 지원단이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 등 본연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원단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철저한 대회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적극적인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¹⁾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과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5억 3,400만원이 감액된 2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종교문화시설건립	29,744	31,884	31,884	21,350	△10,534	△33.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정률 30% 이내)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설 설계 및 공사 등으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규모 조정 등의 노력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4년도 국회 결산 심사 결과에서도 실집행률 부진 사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24 회계연도 결산	<p>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p> <p>- 지자체의 사업지연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2024년 실집행이 0원인 사업이 존재하는 등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소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음</p>	<p>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p>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현장 점검으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5년도 실집행률은 48.1%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시 지방투자심사 이행 여부, 부지 확보 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전관리 강화 ○ 지자체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토록 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현장 점검(25년 20개소)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관리 강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2일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5년간(2022~2026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부처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2	9,160	9,160	6,968	6,968	6,667	13,635	8,432	5,040	163	61.8
2023	25,393	25,393	18,807	18,807	5,040	23,847	12,284	11,389	174	51.5
2024	28,776	28,776	25,066	25,066	11,389	36,455	19,608	16,658	189	53.8
2025	35,914	35,914	29,744	29,744	16,658	46,402	22,336	21,966	2,100	48.1
2026.7.	31,884	31,884	20,210	20,210	21,966	42,176	11,052	-	-	26.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27년도 실집행률 목표치는 55.0%로 2025년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집행률 55.0%를 적극적 목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체부에서 2027년 예산안의 차년도 연부액을 31억 6,100만원 조정하였고, 추가적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구조조정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사업 국비 연부액 2027년 미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당초 투자계획				변경후 투자계획		
		'26년	'27년	'28년		'26년	'27년	'28년
합계	6,000	300	3,440	2,260	⇒	300	-	5,700
국비	1,800	90	1,030	680		90	-	1,710
지방비	3,000	150	1,720	1,130		150	-	2,850
자부담	1,200	60	690	450		60	-	1,140

[전주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사업 국비 연부액 2027년 미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당초 투자계획					변경후 투자계획			
		26년	27년	28년	29년		26년	27년	28년	29년
합계	18,100	660.7	7,103.3	7,000	3,330	⇒	660.7	-	7,000	10,433.3
국비	5,430	200	2,131	2,100	999		200	-	2,100	3,130
지방비	12,670	466.7	4,972.3	4,900	2,331		466.7	-	4,900	7,303.3

다만, 예산안 규모 조정과 함께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률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집행 현장 점검 등 실행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사업 재원 확보 필요

가. 현 황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¹⁾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7억 300만원이 증액된 31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7,121	75,139	75,139	101,135	25,996	34.6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13,017	16,500	16,500	31,203	14,703	89.1
학교예술강사 지원	13,017	16,500	16,500	31,203	14,703	89.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로 수행되며, 지원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이다.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고 예술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예술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535-301의 내역사업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에 예술강사를 초청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 실시
 - * 지원분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사업목적)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예술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 예술 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적 감수성 향상
- (사업예산(안)) 31,203백만원
 - *'26년 예산 16,500백만원 대비 14,703백만원 증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 관련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으로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서 예술교육 파행 및 예술인 생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정 감사 등에서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복원 및 강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므로, 문체부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 합리화 과정에서, 기 추진 중인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국고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국고지원 사업이 아닌 지방교육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22 회계연도 결산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정규교육과정 내 학생들이 지원받는 사업이므로 부처별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문체부·교육부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투입 비율을 당초 합의한 5:5로 이행하지 않고, 2022년 기준 6.3:3.7의 비율로 편성 운영 중임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국고지원 사업이 아닌 지방교육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따라 2024년 국고 예산은 2023년 대비 50% 감액된 28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은 2023년 대비 77.4% 감액된 13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 등과 지방교육재정 확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삭감된 국고 예산분과 맞춰 증액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4년 소폭 증액되었으나 2025년 298억 5,1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2025년부터는 지방비 예산도 배정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전체 예산은 2023년 951억 2,600만원에서 2024년 657억 2,200만원, 2025년 428억 6,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국고	57,472	28,736	13,017	16,500	31,2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41	34,079	29,851	44,721 ¹⁾	미정
지방비	5,813	2,907	-	-	-
합계	95,126	65,722	42,868	61,221	-

주: 1) 특별교부금 18,500백만원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수업 시수는 2023년 152만 9,072시수에 서 2024년 104만 2,860시수, 2025년 67만 8,904시수로 감소하였고, 강사 1인당 평균 시수도 절반 이상 줄었으며, 학교예술강사의 평균 연봉은 2024년 933만원에 서 2025년 633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예술교육 파행 및 예술인 생계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6년에는 국비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고, 2026년 5월 18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되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강사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회복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시 예술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복원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문체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대비 147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운영비와 식대 등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예술강사가 단기형 예술캠프 형태로 학교를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기획사업이 171억 2,000만원 증액되었다. 문체부는 기획사업을 통해 참여강사 1,500명 기준으로 인당 연평균 686만원의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7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안)
운영비	○ 4,415백만원 (11개소×33백만원×12개월)	4,415
식대 등	○ 9,668백만원 - (기존장르) 8,175백만원(4,500명×182천원×10개월) - (신규장르) 290백만원(300명×182천원×5개월) - (공정수당) 1,203백만원	9,668
기획사업	○ 17,120백만원 - (공연 프로그램) 9,996백만원(1,040개교×9.6백만원) - (전시 프로그램) 3,965백만원(325개교×12.2백만원) - (상영 프로그램) 3,159백만원(195개교×16.2백만원)	17,120
합계		31,2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2027년 예산안에서 국고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으로 교부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23년도 수준의 예산 복원은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문체부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 및 교부금 중 어느 쪽으로 재원을 활용할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¹⁾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영화계정, 콘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펀드 등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80억원이 증액된 6,03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55,000	603,000	148,000	32.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과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각각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각각 2,010억원 및 720억원이 편성되었다.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중심의 모펀드를 통해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된 1,300억원이 편성되었다.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는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 및 콘텐츠 정책금융의 확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400억원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내역사업별 펀드 비교]

구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콘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목적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영화산업 투자재원 확충 및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기여	민간중심의 모펀드를 통해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수요에 기반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해외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해외 자본의 국내투자 촉진 및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정부출자 비율	60%	60%	50%	40%
모펀드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
운용방식	재간접투자	재간접투자	재간접투자	재간접투자
투자대상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한국영화 프로젝트 등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등	K-콘텐츠 중소·벤처기업
주목적투자비율	60%	60~70%	50%	40% 이상
2027년도 예산안	2,010억원	720억원	1,300억원	2,00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신규 출자 2,000억원과 재출자 1,900억원을 합산한 3,900억원 출자로 IP 펀드 등 5종의 펀드를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재출자 금액은 2026년 말 기준 회수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후 최종 확정되며, 회수재원 잔액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7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계획]

(단위: 억원)

분야	출자액 (자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IP 펀드	1,200	2,000	60%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로,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문화일반 펀드	1,200	2,000	60%	분야 제한없이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투자하여 콘텐츠기업의 스케일업 촉진
CT 펀드	600	1,000	60%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 원천기술 전분야), 창작 시설 등에 투자
콘텐츠 신성장 펀드	450	750	60%	성장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에 집중 투자
M&A·세컨더리 펀드	450	750	60%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식을 인수
합계	3,900	6,500	60%	

주: 세부출자내용은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720억원을 신규 출자하여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3종의 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모태펀드 영화계정 조성계획]

(단위: 억원)

분야	출자액 (자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500	833	60%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메인투자 ¹⁾ - 제작사의 영화 IP 확보 지원, 강소영화제작사 육성 목적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	140	233	60%	한국영화 프로젝트(순제작비 30억이하 등)에 약정총액의 70% 의무 투자비율 설정 - 중저예산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목적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80	133	60%	한국 애니메이션 영상물 프로젝트에 약정총액 의 60% 의무 투자비율 설정 - 한국 애니메이션영화 경쟁력 강화 목적
합계	720	1,200	60%	

주: 1) 통상 순제작비의 50% 이상 투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전략펀드는 2027년 1,300억원을 신규 출자하여 AI 활용 콘텐츠, 대작 IP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7년 콘텐츠 전략펀드 조성계획]

(단위: 억원)

분야	출자액 (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K-콘텐츠 · 미디어	100 (과기정통부 50)	300	50%	방송·영상 콘텐츠·미디어 관련 국내 기업 및 프로젝트
K-컬처 밸류업 펀드 (블라인드 및 프로젝트 중심)	1,200	2,400	50%	콘텐츠 대작 IP와 AI콘텐츠 및 K-컬처 산업 전반에 대규모·집중적 투자하는 K-컬처 밸류업 펀드
합계	1,300	2,700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리그 펀드는 2,000억원을 신규 출자하여 해외 운용사, 해외-국내 공동 운용사 및 역외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운용사를 대상으로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역외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글로벌리그 펀드 조성계획]

(단위: 억원)

분야	출자액 (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글로벌 리그 펀드	2,000	5,000	40%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자본 마중물 역할 수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문화 및 영화계정의 청산펀드 출자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을 살펴보면, 수익을 기록한 분야는 2개에 불과하며 대다수 펀드가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계정 내 게임 분야가 23.7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기준수익률(7%)을 크게 상회하였고, 모태펀드 출자비율 60%로 조성된 문화산업 분야가 2.15%의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자 분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문화계정에서는 드라마 분야가 △26.34%로 가장 큰 폭의 손실을 보였으며,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분야 역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52%, △9.64%의 저조한 실적을 냈다. 이 외에도 글로벌콘텐츠(△16.23%), 제작초기(△10.61%, △4.22%), 문화산업(△9.58%, △7.84%, △4.90%), 방송드라마(△6.83%), CG/3D(△6.69%), 융합콘텐츠(△5.61%), 공연예술(△4.97%), 콘텐츠영세기업(△4.51%), 방송영상(△3.94%) 등 계정 전반에 걸쳐 기준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는 수익률이 확인된다. 아울러 영화계정 역시 중저예산영화 분야가 △9.24%, 한국영화 분야가 △4.05%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수익률]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 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기준수익률	실제수익률
문화	문화산업	문화산업	30	8	△7.84
	문화산업	문화산업	40	8	△9.58
	CG/3D	CG/3D	50	5	△6.69
	글로벌콘텐츠	글로벌콘텐츠	40	5	△16.23
	문화산업	문화산업	60	5	2.15
	방송드라마	방송드라마	60	3	△6.83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25	5	△9.64
	제작초기	제작초기	70	5	△10.61
	제작초기	제작초기	70	0	△4.22
	게임	게임	40	7	23.78
	드라마	드라마	50	5	△26.34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	70	5	△5.61
	공연예술	공연예술	70	0	△4.97
	방송영상	방송영상	60	5	△3.94
	콘텐츠영세기업	콘텐츠영세기업	70	0	△4.51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25	5	△23.52
	문화산업	문화산업	40	5	△4.90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 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기준수익률	실제수익률
영화	한국영화	한국영화	60	5	△4.05
	중저예산영화	중저예산영화	60	5	△9.24

주: 1. 내부수익률(IRR) 기준

2. 최근 5년간 청산된 펀드 기준(2022년 이후 청산조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문화 및 영화계정은 문화·영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영세기업 및 저예산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 코로나19, OTT 등장 등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의 수익성과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투자방향 조정 및 성과 분석 강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이 높은 지분투자 비중을 높이고, 단일 장르가 아닌 기능(IP, 수출 등) 단위의 자펀드 조성으로 투자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며, 운용사 선정과 투자·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익성과 정책 목적의 균형 달성을 위한 객관적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정책펀드는 민간이 잘 투자하지 않는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므로 사모펀드처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조한 수익률이 지속될 경우 민간이 참여할 유인이 사라져 정부의 부담 구조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민간 시장에 해당 영역의 투자 성과에 관한 왜곡된 신호를 제공하여 오히려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수익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메가관광권 조성: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등

가. 현 황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의 동선을 5개 지방공항과 연계한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으로 분산시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 및 체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 예산안은 659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메가관광권 조성	-	-	-	65,912	65,91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동안 약 4천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외래객의 지역방문·내수촉진 견인을 위한 범부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9월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관광권은 방한 관광객의 여행이 시작되는 관문도시와 그 주변의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도시를 연결하는 관광 중심 권역으로, 김해, 대구, 청주, 양양, 무안 공항 등 5개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5대 관광권이 선정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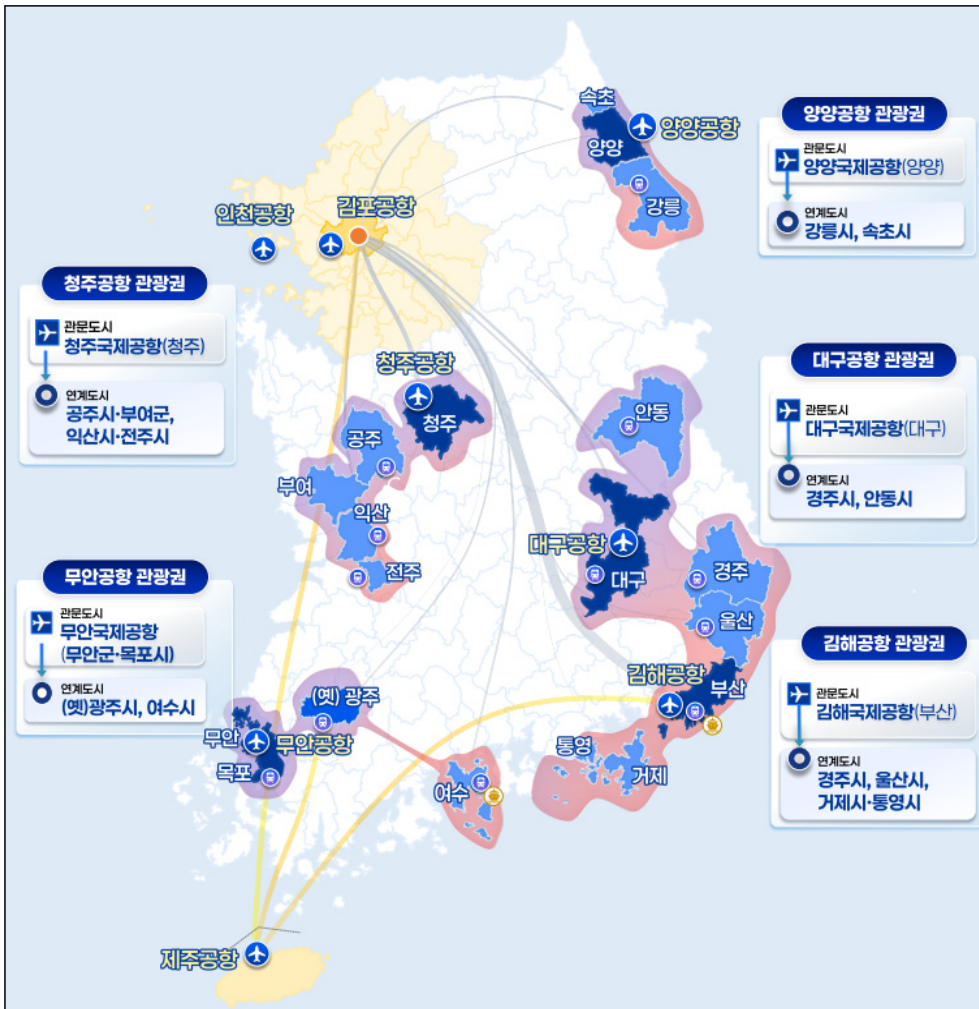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64-305

[5대 관광권 선정 결과]

지방공항	관광권	비고
김해공항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부산과 대구를 '경주'로 연결하는 관광권
대구공항	대구~경주~안동	
청주공항	청주~공주·부여~익산·전주	
양양공항	양양~강릉~속초	
무안공항	무안·목포~(옛)광주~여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대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규모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는 사업 구조상 지자체의 자원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지연 및 예산 불용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자원 조달 협의와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동 사업의 2027년 국비 요구액은 659억 1,200만원이며, 문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총 지방비는 275억 6,500만원이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지방비 38억 원 분담)',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지방비 25억 원 분담)'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은 1:1 매칭 구조로 재정 부담이 크다. 나아가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관광권 해외홍보(지방비 54.6억 원 분담)', '관광권 교통 편의 개선(지방비 31억 원 분담)' 등에도 수십억원 단위의 지방비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메가관광권 사업 내역사업별 개요]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목적/내용	시행주체/방법	재원조달
관광권 통합 브랜드 구축·홍보 및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지역 관광 브랜드 구축 등 인지도 제고 ○(내용) 지역 관광 대표 '브랜드' 구축·홍보,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5,236 ○(지방비) 2,035
관광권 해외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지역 이미지 확산 등 글로벌 관광 경쟁력 제고 ○(내용) 권역별 홍보대사 활용, 광고 콘텐츠 제작 및 해외 광고 송출 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12,740 ○(지방비) 5,460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내용) 지방공항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여행상품 개발, 판촉 등), 수도권-지방공항 환승 프로모션, 거버넌스 구축 등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10,506 ○(지방비) 4,074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목적/내용	시행주체/방법	재원조달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목적)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내용) 기항지 특성별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 조	○(국비) 3,800 ○(지방비) 3,800
관광권 교통 편의 개선 및 교통 연계 관광 활성화	○(목적) 지역 간 교통편의성 제고를 통 한 초광역 지역관광 유도 ○(내용) 관광교통 편의 개선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교통수단-관광지 입 장권 통합 관광패스 제공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국비) 13,100 ○(지방비) 3,100
지역 결제편의 제고	○(목적) 지역 민간 협업을 통한 외국인 친화 결제기반 마련 등 ○(내용) 표준 결제 QR 배포 및 NFC 인 프라 보급 확대, 쇼핑 결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국비) 1,800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목적) 지역관광 문제 해결,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 ○(내용) 스토리 기반 · 교통거점 연계 · 유망 관광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 보, AI 기반 관광현장 문제 해결 서비 스 지원 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국비) 8,810 ○(지방비) 2,490
한류 관광 활성화	○(목적) 방한외래객의 지역관광 수요 확대 ○(내용) 지자체의 K-팝 콘서트 개최 지 원, K-콘텐츠 촬영지 관광상품화, K- 콘텐츠 체험전시관 운영 등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국비) 7,420 ○(지방비) 4,106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목적)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활력 도모 ○(내용) 지역 음식특화거리에 문화예술 축제, 지역 대표 음식 연계 체험 프로 그램 지원, 청년 창업 팝업 스토어 지 원 등	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 조	○(국비) 2,500 ○(지방비) 2,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지방정부와 충분한 자원 조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편성 및 교부 이전에 각 대상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의지를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방한객의 인지 단계부터 지방 입국, 이동망 구축, 관광 콘텐츠 체험에 이르기까지 방한객의 전 여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특정 내역사업에서 지방비 부담금 미확보로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메가 관광권'이라는 가치 사슬 아래 연계된 다른 사업들의 재정 투자 효과까지 반감될 위험이 있다. 문체부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4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공사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광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예산 교부 이후의 단순한 행정 연락망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각 지방정부가 처한 재정 여건과 지역별 인프라 특성을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이 '초광역 관광권 육성'이라는 본연의 통합적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 하달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방정부와의 원활하고 긴밀한 자원 분담 협의를 수행하고 지역 현장의 실수요와 재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형적인 사업 묶기를 넘어 세부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초광역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7년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 예산안은 총 659억 1,2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을 구성하는 9개 내역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중 순수하게 신규로 기획된 사업은 '관광권 통합 브랜드 구축·홍보 및 협의체 운영'(52억 3,600만원)과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88억 1,000만원)' 사업이다. 나머지 7개 내역사업은 2026년도 기존 세부사업에서 이관·재편성된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관광권 해외홍보(127억 4,000만원)'는 기존 '한국관광 해외광고'에서 이관되었고,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38억원)는 기존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에서 이관되었으며, '한류관광 활성화'(74억 2,000만원),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25억원) 등

은 기존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분리되어 이관되었다. 또한 '관광권 교통 편의 개선'(131억원)과 '지역결제편의 제고'(18억원)는 기존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된 것이다.

[메가관광권 사업 내역사업 이관 내역]

(단위: 백만원)

2026 기존 세부사업	2026 본예산 (내역사업 기준) (A)	2027 메가관광권 내역사업명	2027 예산안(B)	증감 (B-A)
한국관광 해외광고	29,875	관광권 해외홍보	12,740	△17,135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750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10,506	9,756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1,350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3,800	2,450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2,000	한류관광 활성화	7,420	5,420
	2,500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00	-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5,433	관광권 교통 편의 개선 및 교통 연계 관광 활성화	13,100	7,667
	700	지역결제편 의 제고	1,800	1,100
스마트관광 활성화	3,000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AI 기반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3,000	-
합계	45,608		54,866	9,2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본 사업은 '초광역 메가관광권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부서별·분야별로 추진되던 개별 관광 사업들(해외광고, 크루즈, 한류, K-푸드, 결제망 등)을 단일 사업 코드로 통합하여 재편성한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기존 사업들을 물리적으로 묶어놓은 예산 구조에서는 각 내역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때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처가 산재한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관광권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초광역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만약 기존 개별 사업 추진 방식과 비교하여 통합 편성으로 인한 정책적 부가가치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 구조 개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 외래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의 파편화된 노력을 하나로 모으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이 당초 의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메가관광권 육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세부 사업 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성과 관리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점 공항 중심의 초광역 관광권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통망·숙박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7년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 예산(659억 1,200만원)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관광권 해외홍보'(127억 4,000만원),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88억 1,000만원), '한류관광 활성화'(74억 2,000만원) 등 주로 홍보 마케팅 및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어 있다. 교통 관련 예산인 '관광권 교통 편의 개선'(131억원)의 경우에도 한국관광통합패스 구축(90억원) 등 결제 및 할인 시스템 구축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다. 초광역 단위의 메가관광권이 실질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체류 시간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문 공항에서 인근 연계 도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광역 교통망(철도, 도로 등)과 체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숙박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마케팅 및 콘텐츠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여행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단지·숙박 시설 조성 계획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리적 인프라 구축 일정과 관광 마케팅 시점을 동기화하고, 하드웨어(교통·숙박)와 소프트웨어(관광콘텐츠·홍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수용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¹⁾은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희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향유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3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16,374	13,605	13,605	13,610	5	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체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원 10개소의 사업비 1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51-302

[2027년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전남, 나주시) 옛 화남산업부지 아트스페이스 조성	1,300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구)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700
(전남, 신안군) 동아시아 인권평화 문화 창작촌 조성	1,200
(인천, 옹진군) 계남분교복원사업	1,450
(강원, 동해시) 동해 구 상수시설 폐산업시설 유희공간 복합문화시설구축	600(신규)
(강원, 횡성군) 폐탄약고활용문화예술단지조성	1,435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 유희공간 문화재생	1,385
(충남, 보령시) 거미·로봇·민화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1,00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2,140
(충남, 홍성군) 옛광신초문화재생사업	2,4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에는 전남광주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 등 13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문화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매년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실집행률은 31.5%(98억 6,800만원), 2024년 35.8%(134억 5,600만원), 2025년 41.2%(158억 8,700만원)로 만성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매년 200억원을 넘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예산현액 313억 9,600만원 중 집행액은 80억 7,2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25.7%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4년간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부처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3	23,531	23,531	18,211	18,211	13,089	31,300	9,868	21,198	234	31.5
2024	31,315	31,315	16,423	16,423	21,198	37,621	13,456	22,142	2,023	35.8
2025	20,721	20,721	16,374	16,374	22,142	38,516	15,887	21,633	996	41.2
2026.8.	13,605	13,605	9,763	9,763	21,633	31,396	8,072	-	561	25.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26년 지원 대상 지자체의 8월 기준 실집행현황을 보면, 지방비 미확보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아직 교부하지 못한 지자체가 전남광주(광주) 등 5곳이고, 교부가 이루어진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업 집행 상황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본청(62.0%)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3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홍성(0.6%), 충남 보령(0.3%), 전남광주 신안(2.3%), 경북 의성(4.0%) 등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는 데다, 교부된 예산마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보인다.

[2026년 지원 대상 지자체별 실집행 및 202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2027년 예산안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전남광주(광주) ¹⁾	-	-	-	-	-	-	-	-
전남광주(나주)	500	-	500	115	-	300	23.0	1,300
전남광주(신안)	800	382	1,182	27	-	-	2.3	1,200
전남광주(영암)	-	693	693	200	-	-	28.9	700
인천(옹진)	200	-	200	21	-	-	10.5	1,450
경기(본청)	350	1,215	1,565	971	-	-	62.0	-
경기(안성)	1,264	2,303	3,567	447	-	-	12.5	-
강원(횡성)	-	-	-	-	-	-	-	1,435
충북(충주)	-	-	-	-	-	-	-	1,385
충남(보령)	-	4,318	4,318	11	-	-	0.3	1,000
충남(공주)	360	769	1,129	315	-	-	28.0	2,140
충남(홍성)	500	-	500	3	-	-	0.6	2,400
경북(의성)	5,789	59	5,848	231	-	-	4.0	-

주: 1) 2026. 8월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이행 중으로 예산 미교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신청 및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기획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순연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6년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12월 준공 예정인 경기 본청 및 기착공한 안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이 여전히 사전행정절차나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남광주(광주),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등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건축물대장 양성화와 같은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이제 막 완료한 상태이며, 충남 공주시와 홍성군 등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경우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예산 불용이 예정되어 있고, 충북 충주시는 9월 이후에야 예산 교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실질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공사 발주 및 착공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26년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경과]

지자체명	사업명	주요 사업추진 경과
전남광주(광주)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전행정절차(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전남광주(나주)	옛 화남산업부지 아트스페이스 조성	사전절차(기획심의) 이행 후 설계 공모 예정, 지방비 3억원 미확보로 불용 예정
전남광주(신안)	동아시아 인권평화 문화 창작촌 조성	주민 의견 수렴 후 공사 발주 예정
전남광주(영암)	영암읍 (구)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실시설계 진행중, 12월 공사 발주 예정
인천(옹진)	계남분교복원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공사 입찰 공고 예정
경기(본청)	경기창작캠퍼스 창작기획공간 조성	내부 준공 완료 및 외부 마무리 단계 진행 중 (‘26. 12월 준공 예정)
경기(안성)	안성라이프스테이션	‘26년 6월 착공하여 추후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지급 예정
강원(횡성)	횡성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전행정절차(건축물 대장 양성화) 이행 중
충북(충주)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 유희공간	지방비 추경 확보로 9월 이후 교부 예정

지자체명	사업명	주요 사업추진 경과
충남(보령)	거미·로봇·민화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석면해체, 폐기물처리 진행 및 10월 공사 발주 예정
충남(공주)	유구읍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충남(홍성)	옛 광신초 문화재생사업	공공건축심의 진행 중, 10월 실시설계 공모 예정
경북(의성)	유휴공간(성남공장) 문화재생사업	전시설계 용역 기술 협상 및 건축공사 진행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10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인 1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2027년도에도 신규 사업 1곳(강원 동해시)을 제외하고 예년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대상지역의 경우 선행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사업: 전년도 이월이 반복되는바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사업¹⁾은 남부권 지역(부산, 전남광주, 울산, 전남, 경남), 충청유교문화권 지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부내륙권 지역(세종, 충남, 전북)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5,600만원 감액된 1,78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96,622	179,468	179,468	178,612	△856	△0.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개요]

내역사업	남부권	충청유교문화권	서부내륙권
사업기간	2024~2033년(10년간)	2019~2028년(10년간)	2017~2026년(10년간)
총사업비	3조 64억원 (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간 2,776억원)	5,125억원 (국비 2,096억원, 지방비 3,029억원)	4,623억원 (국비 1,951억원, 지방비 2,672억원)
대상지역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세종·충남·전북
세부 내역사업	총 142개 (개발사업 109개, 진흥사업 33개)	총 39개 (개발사업 29개, 진흥사업 10개)	총 36개 (개발사업 25개, 진흥사업 11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17

나. 분석의견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적행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남부권 129개소와 충청유교권 29개소의 사업비 1,78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 광역권 관광개발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총 158개 178,612백만원(개발 155,132 / 진흥 23,480)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총 129개 사업 146,281백만원(개발 129,627 / 진흥 16,654)
 - (개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 58개 사업 129,627백만원
 - (진흥)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특화 14개, 7,265백만원), 루트·홍보 등 관광자원 연계(공동 30개, 3,714백만원), 개발사업별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맞춤형 27개, 5,675백만원)
 - 충청유교권 광역관광개발: 총 29개 사업 32,331백만원(개발 25,505 / 진흥 6,826)
 - (개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 10개 사업 25,505백만원
 - (진흥)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4개 사업, 1,000백만원),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홍보 등(15개, 5,826백만원)
- * 사업유형별(개발, 진흥), 비목별(자본, 경상) 구분 기준에 따른 개소수 산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최근 4년간 실적행현황을 보면 남부권·충청유교문화권·서부내륙권 세 개의 내역사업 모두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실적행률은 각각 남부권 27.2%, 충청유교문화권 57.0%, 서부내륙권 57.8%로 저조하며, 2026년 8월 말 기준 실적행률도 남부권 22.4%, 충청유교문화권 23.6%, 서부내륙권 8.2%이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보조사업자의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남부권 578억 6,400만원, 충청유교문화권 204억 5,400만원, 서부내륙권 124억 1,700만원 등 세 권역을 합쳐 총 907억 3,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실적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 규모 역시 매우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부처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추경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B)
남부권	2023	5,500	-	-	-	-	-	-	-	-
	2024	27,778	21,414	21,414	-	21,414	8,181	13,233	-	38.2
	2025	78,824	67,144	67,144	13,233	80,377	21,854	57,864	659	27.2
	2026.8.	141,488	47,259	47,259	57,863	105,122	23,594	-	-	22.4
충청 유교 문화권	2023	34,031	29,006	29,006	29,183	58,189	21,815	36,374	-	37.5
	2024	22,783	21,933	21,933	36,374	58,307	24,544	32,913	850	42.1
	2025	15,181	14,706	14,706	32,913	47,619	27,165	20,454	-	57.0
	2026.8.	21,139	14,638	14,638	20,454	35,092	8,273	-	-	23.6
서부 내륙권	2023	21,307	18,807	18,807	24,826	43,633	9,285	28,434	5,914	21.3
	2024	19,653	18,857	18,857	28,434	47,291	16,690	24,474	6,127	35.3
	2025	16,398	14,574	14,574	24,474	39,048	22,591	12,417	4,041	57.8
	2026.8.	17,883	8,305	8,305	12,417	20,722	1,702	-	-	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8월 말 현재에도 서부내륙권 8개, 충청유교문화권 5개, 남부권 39개 사업이 실집행률 10% 미만의 심각한 집행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지연, 설계 및 사업계획의 변경, 부지 및 예산 확보 난항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2027년에도 집행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6년 광역권 관광개발 실집행률 1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사업추진 경과(집행부진 사유)
서부 내륙 권 (8)	전주	음식관광 창조타운	8,000	5	-	사전행정절차 지연,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중
	충남, 전북	서부내륙권 특화브 랜드 개발	120	-	-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충남, 전북	서부내륙권 통합 흥 보마케팅 사업	900	78	8.7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충남, 전북	서부내륙권 미식기 행 관광상품 개발	700	38	5.5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세종	비단가람온길 레저 코스	100	-	-	시비 비매칭으로 사업 포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사업추진 경과(집행부진 사유)
	세종	서부내륙권 4색이음 관광상품 개발	100	1	1.5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세종	서부내륙권 미식기 행 관광상품 개발	250	2	0.9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세종	서부내륙권 특화 체 험관광상품 육성	100	8	8.3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충청유교 문화 권 (5)	대전	효(孝)문화뿌리마을	3,395	204	6.3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토 지 수용재결), 공사 착공 (‘26.9.~’28.12.)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500	2	0.2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 (매장유산표본조사) (‘26.6.~’26.9.), 1차공사 준공 및 2차 공사 착공 (‘26.12.)
	서산	밤하늘산책원	2,423	12	0.7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 매입,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중 (‘24.11~’26.11.)
	계룡	사계문화 체험관	428	-	-	사전행정절차 중 (지구단 위계획 수립), 기본 및 실 시설계 예정 (‘26.11.~’27.6)
	세종, 충북, 충남	충청유교 브랜드형 오마이갓파티	322	1	0.3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광주 동구	예술집점 야행관광 공간 조성	5,405	537	9.9	공사 중(‘25.4.~’27.12.),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남부 권 (39)	울산 울주군	울주 산악관광 베이 스캅프 조성	2,466	93	3.8	실시설계 완료 (‘25.5.~’26.5.) 및 공사 착 공 준비 중(‘26.10.~)으로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구례	섬진강 레인보우 워 크 관광경관 명소화	987	34	3.4	공사 중 (‘25.11.~’27.12.),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 폼 조성	2,657	1090	4.1	실시설계 추진 중 (‘25.6.~’26.11.),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무안	도리포 관광경관 명 소화	2,585	-	-	실시설계 추진 중 (‘24.12.~’26.9.),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사업추진 경과(집행부진 사유)
	강진	가우도 빛의 숲 관 광 갤러리 조성	2,074	-	-	실시설계 추진 중 (‘25.8.~’26.9.),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나주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2,822	-	-	실시설계 추진 중 (‘25.6.~’26.11.),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 소화	229	-	-	사업계획 변경(부지변경) 검토 중, 실시설계 추진 예정(‘26.10.~’27.9.)
	진도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685	-	-	공사 중(‘26.6.~’27.12.),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3,264	150	4.6	공사 중(‘26.2.~’27.12.),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해남	목포구등대 관광 경 관 명소화	283	4	1.4	실시설계 추진 중 (‘26.6.~’27.6.),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영광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423	21	5.0	실시설계 추진 중 (‘25.12.~’26.11.),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하동	북케이션 관광 스테 이 확충	3,984	271	6.8	실시설계 추진 중 (‘26.1.~’26.10.),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산청	밤머리재 전망대 관 광경관 명소화	608	-	-	공사 중(‘25.9.~’27.12.),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고성	상족암디지털놀이터 명소화	5,009	190	3.8	공사 중 (‘25.12.~’27.12.),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통영	사랑도 관광기반 구 축	222	-	-	사업계획 변경(부지변경) 검토 중, 실시설계 착수 예정(‘26.12.~)
	창원	K예술마실섬 네트워 크 구축	2,687	170	6.3	공사 중 (‘25.12.~’27.12.),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김해	진영 봉하마을 관광 명소화	1,851	71	3.8	공사 중(‘25.9.~’27.12.),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함양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화	3,146	4	0.1	실시설계 완료 (‘25.1.~’26.7.) 및 공사 착공 준비 중(‘27.2.~)으로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사업추진 경과(집행부진 사유)
	남해	해양스포치유여행 플랫폼 조성	2,060	68	3.3	실시설계 추진 중 (‘24.10.~’26.11.),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거제	지심도 산마루문화 놀이터명소화	3,429	28	0.8	실시설계 추진 중 (‘25.8.~’26.10.),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양산	낙동선셋 바이크파 크 조성	694	5	0.7	실시설계 추진 중 (‘25.11.~’26.11.),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진주	도시숲 가족힐링 충 전소	1,755	112	6.4	실시설계 추진 중 (‘24.9.~’26.10.),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김해	낙동선셋 수상레포 츠평크 조성	200	-	-	기본계획 변경(하천구역 설치 시설물 변경) 검토 지연
	부산	광역관광루트 상품 화 기반 구축	116	1.6	1.4	진흥사업 추진 중,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부산	남부권 통합협의회 및 통합관리체계 구 축	100	1.1	1.1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광주	광역관광루트 상품 화 기반 구축	68	1.2	1.8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광주	남부권 통합협의회 및 통합관리체계 구 축	100	-	-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울산	광역관광루트 상품 화 기반 구축	67	1	1.5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울산	남부권 통합협의회 및 통합관리체계 구 축	100	-	-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전남	남도고택 달밤스테 이 상품화	284	19.7	6.9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전남	명가명인 연계 '남도 한상' 상품화	225	19.2	8.5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전남	섬진강스테이 특화 상품 육성	461	28.4	6.2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전남	지리산권 웰니스 및 위케이션 상품 고도 화 지원	100	-	-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전남	지리산권 ESG 가치 여행 특화상품 육성	50	-	-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사업추진 경과(집행부진 사유)
	전남	광역관광루트 상품 화 기반 구축	164	11.4	7.0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경남	지리산권 ESG 가치 여행 특화상품 육성	275	11	4.0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경남	광역관광루트 상품 화 기반 구축	164	2.6	1.6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경남	남부권 통합협의회 및 통합관리체계 구 축	100	8.4	8.4	진흥사업 추진 중, 기성 금 지급시기 미도래

주: 1. 예산현액과 실집행액은 이월액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처럼 2026년에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교부할 경우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7년 예산을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하고,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¹⁾은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이용 경험 축적으로 청년을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7년부터는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563억 8,100만원이 증액된 7,92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년문화예술패스	10,340	36,146	36,146	792,527	756,381	2,092.6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²⁾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 편성되어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2026년에는 19~20세 성인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7년 계획안에는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³⁾ 643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6-300

2)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

3)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026년에는 대상연령(19~20세) 인구의 30%인 28만명이 지원대상이었으나, 2027년 계획안은 19~34세 인구의 70%인 643만명을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지원대상의 수혜율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026~2027년 세부내역 비교]

구분	2026년	2027년
지원대상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19~34세 청년(1993~2008년생)
지원금 산출내역	· (수도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 (수도권) 355만명×100,000원 · (비수도권) 288만명×150,000원 *지방비 매칭 없음
지원내용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영화, 도서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온라인포인트) 발급	2026년 지원내용에 '체육'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이후 계획현액 170억원 중 42억 4,1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 95억 1,0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265억 1,000만원 중 103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0%에 불과하였다.

2026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5년 이월액 포함 계획현액 408억 8,300만원 중 1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27.2%) 올해 또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잔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A)							
2024	17,000	17,000	-	17,000	4,241	24.9	24.9	9,510	3,249
2025	17,000	17,000	9,510	26,510	10,340	60.8	39.0	4,737	11,433
2026.8.	36,146	36,146	4,737	40,883	11,120	30.8	27.2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발급 및 사용 현황을 보면, 패스 발급률 대비 실제 예산 사용액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상 지원 인원 대비 발급 인원을 의미하는 발급률은 2024년 79.8%, 2025년 74.2%에서 2026년 8월 기준 94.9%로 증가하였다. 발급자 중 1회 이상 패스를 이용한 비율인 사용률 또한 2026년 94.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사용액은 2024년 수도권 114,044원, 비수도권 111,449원, 2025년 수도권 118,387원, 비수도권 110,269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6년 8월 현재 수도권 60,647원, 비수도권 72,563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다수의 지원 대상자가 패스를 발급받고 최소 1회 이상 예매처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지원 한도를 충분히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획 현액	집행액	전체지원 대상자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사용액	1인당 평균 사용액(원)	
											수도권	비수도권
2024	23315	7,999	4505	1000	36.8	12706	79.8	7072	55.4	7,999	114044	111449
2025	22951	11,741	44364	1000	36.2	11875	74.2	10294	86.1	11,741	118387	110269
2026.8.	48883	16632	94222	2000	29.7	26786	94.9	25107	94.5	16645	60647	72563

주: 1. 2026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실적으로, 이용자의 예매 취소 등에 따라 사용액 및 건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5년부터 발급 후 미사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스 발급을 2회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1회차 발급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전

혀 없는 발급자의 지원금을 회수하여 이를 2회차 발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패스 전액 미사용자 중 희망자에게 협력예매처 변경 기회를 1회 부여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존 2개 협력 예매처를 9개 협력 예매처로 확대하고, 중앙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가 협력 예매처별 회원가입만으로 다양한 예매처에서 패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후 미사용 회수 및 재발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회수 기준일	회수 대상	회수 인원	회수액(국비)	재발급 현황
2024	해당없음	-	-	-	해당 없음
2025	2025.6.30	6.30.까지 전액 미사용한 발급자	36,339	3,634	1차 발급 : 86,713명(회수 후) 2차 발급 : 32,032명
2026	2026.7.31	7.31.까지 전액 미사용한 발급자	27,132	3,318	1차 발급 : 238,150명(회수 후) 2차 발급 : 27,636명(8.31.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무려 2,092.6% 늘어난 7,925억 2,7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 청년층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인구 대비 수혜율 목표치 역시 2026년 30% 수준에서 70%로 대대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이다. 즉, 단기간에 사업의 외연을 급격하게 팽창시키는 대규모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대규모 증액안의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앞선 2024년 24.9%, 2025년 39.0%, 2026년 8월 기준 27.2%라는 저조한 집행률은 기존 편성 예산조차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체부가 미사용분 회수 및 재발급 등의 개선책을 시행하며 편의성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1인당 평균 사용액이 지원 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집행을 제고 방안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규모만 20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액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2027년 계획안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대규모 증액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027년 대상 연령 및 수혜율의 대폭 확대로 예산이 급격히 팽창한 만큼, 그동안 지적되어 온 낮은 실집행률과 1인당 평균 사용액 미달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의 외연을 넓히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연도별 실제 집행 추이와 개별 청년의 지원금 전액 소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울러 미사용분 회수 및 사용 독려 등 정부의 편의성 개선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수도권 지원에 더하여,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수도권(10만 원)과 비수도권(15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이라는 포괄적인 기준 안에는 문화예술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와 기초적인 문화 관람 인프라조차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2026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8월말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A)	발급 인원 (B)	발급률 (B/A)	사용 인원 (C)	발급자 사용률 (C/B)	발급 포인트 (D)	사용액 (E)	발급포인트 사용률 (E/D)
대전	8,740	3,000	34.3	2,900	96.7	600	241	40.2
서울	47,298	47,298	100.0	44,514	94.1	7,095	2,716	38.3
경기	78,581	78,535	99.9	73,551	93.7	11,780	4,460	37.9
인천	16,471	14,823	90.0	14,008	94.5	2,223	830	37.3
세종	2,681	2,681	100.0	2,568	95.8	536	199	37.1
충북	8,662	8,652	99.9	8,173	94.5	1,730	631	36.4
충남	11,925	11,670	97.9	10,999	94.3	2,334	847	36.3
대구	12,932	6,466	50.0	6,253	96.7	1,293	464	35.9
강원	7,845	7,832	99.8	7,321	93.5	1,566	550	35.1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A)	발급 인원 (B)	발급률 (B/A)	사용 인원 (C)	발급자 사용률 (C/B)	발급 포인트 (D)	사용액 (E)	발급포인트 사용률 (E/D)
광주	8,905	8,905	100.0	8,533	95.8	1,781	612	34.4
제주	3,970	3,970	100.0	3,754	94.6	794	269	33.9
울산	6,171	6,171	100.0	5,896	95.5	1,234	417	33.8
부산	15,624	15,624	100.0	15,052	96.3	3,125	1,055	33.8
전북	9,904	9,904	100.0	9,404	95.0	1,980	666	33.6
경남	17,974	17,956	99.9	17,093	95.2	3,591	1,198	33.4
전남	9,293	9,289	100.0	8,682	93.5	1,858	617	33.2
경북	13,024	13,010	99.9	12,338	94.8	2,602	860	33.1
합계	280,000	265,786	94.9	251,039	94.5	46,124	16,632	36.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실제 거주 지역의 문화 인프라 수준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혜택과 포인트 사용 가능성에는 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 소도시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여 지급받은 포인트를 전액 소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발급률 대비 저조한 1인당 평균 사용액'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지원금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일률적인 방식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이들을 문화소비 주체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제 문화예술패스 사용 실태와 미사용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문화 인프라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에게는 비수도권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데 따른 교통비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근 문화 거점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 바우처 연계, 지역 내 유희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등 금전적 지원과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실적의 특정 장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초예술 분야의 관람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장르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에는 뮤지컬(각각 이용금액 기준 58.6%, 33.8%)과 콘서트(11.3%, 45.2%) 중심의 소비 속에서도 클래식/오페라(13.0%, 7.5%) 및 연극(10.4%, 6.1%) 등 기초예술 분야가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영화와 도서가 지원 대상 장르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8월 기준 영화 부문이 전체 이용 금액의 41.1%, 이용 건수의 75.3%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장르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2024~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2026. 8.			
	이용금액	비율	이용건수	비율	이용금액	비율	이용건수	비율	이용금액	비율	이용건수	비율
클래식/오페라	1,043	13.0	1406	11.0	880	7.5	12120	7.5	441	2.7	6,792	1.1
콘서트	901	11.3	8,075	6.3	5,302	45.2	4433	27.3	6,001	36.1	4983	8.0
전시	348	4.4	20119	15.8	692	5.9	37812	23.2	330	2.0	18285	2.9
연극	833	10.4	29887	23.5	721	6.1	23337	14.3	638	3.8	17646	2.8
뮤지컬	4,685	58.6	52238	41.1	3,971	33.8	42526	26.1	1,748	10.5	20899	3.4
발레/무용	185	2.3	2,682	2.1	170	1.5	2,372	1.5	62	0.4	992	0.2
국악	4	0.1	170	0.1	4	0.04	235	0.1	4	0.0	160	0.0
영화	-	-	-	-	-	-	-	-	6,848	41.1	46,154	75.3
도서	-	-	-	-	-	-	-	-	572	3.4	38,483	6.2
합계	7,999	100.0	127277	100.0	11,741	100.0	16276	100.0	16,645	100.0	60,804	100.0

주: 1. 2026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실적으로, 이용자의 예매 취소 등에 따라 사용액 및 건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영화 등 대중 친화적 장르로의 소비 집중은 상대적으로 기초예술 부문의 급격한 비중 하락을 초래하였다. 2024년 13.0%였던 클래식/오페라의 이용 금액 비중은 2026년 2.7%(건수 기준 1.1%)로 급감하였고, 연극(10.4% → 3.8%)과 발레/무용(2.3% → 0.4%)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악의 경우 매년 0.1% 이하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장르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영화 관람 지원은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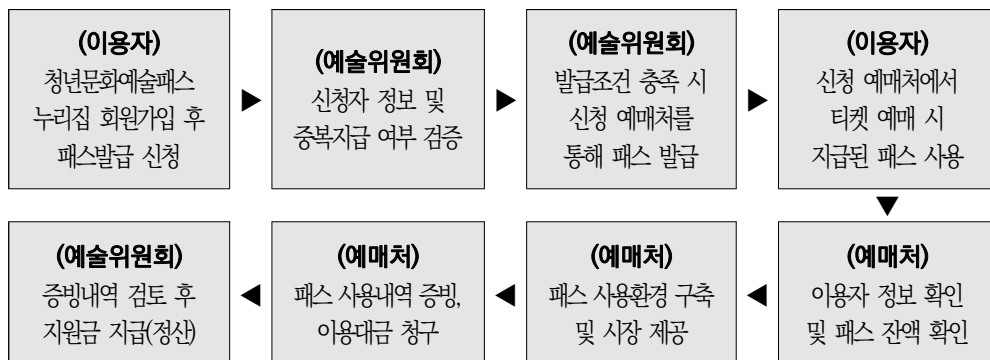
년들의 패스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청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순수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자생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단순한 영화 관람 지원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장르 편중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대중문화와 기초예술 간의 균형 있는 문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패스 지원금 중 일정 한도는 클래식, 연극, 무용 등 기초예술 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지정하거나, 기초예술 분야 예매 시 할인 혜택 및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예매 이후 현장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재하여 부정수급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인증 시스템 강화 및 할인 보전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이용자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급을 신청하면 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급 여부를 검증한 후 발급조건 충족 시 9군데 온라인 지정 예매처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관람객은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공연·전시·영화 등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온라인 예매처에서 티켓을 예매한 이후, 실제 공연 현장에서 실물 티켓을 수령하거나 입장하는 단계에서는 관람객이 패스를 발급받은 본인인지 대조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타인에게 티켓을 양도하거나 대리 발권을 하는 등의 부정수급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지원금이 실제 대상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어지는지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매 및 현장 발권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본인 인증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사전에 전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대상 청년에게 예매 시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직접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가 공연장·전시관·영화관 및 기획사 등 협약 업체에 청년이 할인받은 차액만큼을 사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정부로부터 확실한 재정 보전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관람객의 본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관리 감독 유인을 창출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없이도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할인 제도의 도입은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기초예술 분야를 진흥하고 장르별 편중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클래식, 오페라, 무용 등 순수예술 공연과 뮤지컬은 단가가 높아 청년들이 한정된 패스 금액(포인트)만으로는 접근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정률 할인이나 큰 폭의 정액 할인이 적용된다면 고가 공연에 대한 가격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져, 저단가 매체(영화, 도서 등)에 집중된 소비를 기초예술 분야로 자연스럽게 분산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예산 보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할인 제도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청년 할인 제도에 동참하는 기획사, 공연장 등 참여 업체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전용 문화예술 특화 청구할인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 기존 관광사업 용자지원 사업과 차별성 확보 필요 등

가. 현 황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¹⁾은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의 지역 대전환과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 소재 호텔 건립의 금융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7년 계획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	-	-	152,281	152,281	순증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	-	-	150,000	15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호텔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연간 750억원, 총 2개소 1,500억원의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한다.

[2027년도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 통화금융기관용자금(450-02): 150,000백만원
- 가.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150,000백만원)
- 연간 75,000백만원 × 2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432-300의 내역사업

정부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추진 방식(이자율, 상환기간 등 용자 조건 및 공모 기준) 등을 반영한 별도의 용자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말에 공고 및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27년 1분기에 용자 대상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비수도권 호텔건설 용자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사업은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새롭게 편성되는 동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최대 150억 원의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하고 있다. 용자 이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2026년 3분기 기준 3.80% 수준이며, 5년 거치 7년 상환의 총 12년 취급 기간을 두고 관광숙박업 등록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규 편성된 '비수도권 호텔건설 용자지원'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형 호텔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7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며, 용자 이율과 취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내 숙박시설 신축 융자 사업과의 비교]

구분	관광산업 융자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예정)자	비수도권(지역) 소재 대형 호텔 신축 계획이 있는 사업체
지원규모	반기 최대 150억	연 750억
융자분야	신축자금	신축자금
지원방식	융자	융자
융자이율 ¹⁾	3.80%('26년 3분기) 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분기별 고시)	기획예산처 협의 예정
취급기간 ²⁾	12년(5년거치, 7년상환)	기획예산처 협의 예정
융자조건	관광숙박업 등록	수도권 외 지역에 대형호텔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총 융자금액	2027년 7,062억원 ³⁾	2027년 1,500억원

주: 1)2) 융자 이자율, 대출기간 등 융자조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 협의 대상

3) 관광숙박업 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사업자에 대한 2027년 융자 계획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4년간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3	449,100	449,100	452,208	448,730	-	3,478	99.2
2024	541,733	541,733	541,733	538,086	-	3,647	99.3
2025	591,863	593,500	593,500	592,352	-	1,148	99.8
2026.8.	644,066	844,491	844,491	541,510	-	-	6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현행 '관광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비수도권 지역의 호텔 신축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약 58개~68개 업체에 712억 원에서 1,036억 원 규모의 자금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의 경우 부산(259억 원), 경북(268억 원), 대구(95억 원) 등 비수도권 전역

에 걸쳐 총 58개 업체에 약 850억 원이 융자되었다. 이는 신규 사업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을 통해 이미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금융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관광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비수도권 호텔 신축 융자 실적]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원	9,866 (5)	12,486 (18)	13,484 (22)	13,091 (16)	5,167 (6)
경남	14,578 (9)	3,949 (5)	10,264 (5)	13,200 (2)	3,500 (3)
경북	1,958 (4)	1,522 (3)	5,420 (9)	12,472 (13)	26,850 (18)
광주	6,250 (1)	1,061 (2)	-	-	-
대구	22,400 (10)	7,210 (3)	736 (1)	7,788 (3)	9,512 (5)
대전	-	-	1000 (1)	-	600 (1)
부산	13,512 (13)	11,352 (8)	11,413 (8)	24,793 (15)	25,933 (15)
세종	-	-	2,300 (1)	-	-
울산	3,319 (3)	21,627 (5)	4,559 (3)	6,000 (2)	4,669 (4)
전남	7,315 (9)	9,184 (5)	3,147 (5)	600 (1)	-
전북	19,263 (10)	4,929 (8)	8,502 (7)	12,466 (7)	8,854 (6)
충남	3,190 (2)	700 (2)	1,673 (2)	-	-
충북	2,000 (1)	23,164 (4)	8,729 (4)	-	-
합계	103,651 (67)	97,184 (63)	71,227 (68)	90,410 (59)	85,085 (58)

주: 1. ()는 업체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호텔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의 대형 호텔 건립이라는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정책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미래대응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하에 편성하였고, 용자 조건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과는 차별화된 방식을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의 시설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순히 재원을 분리하고 개소당 용자 한도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설득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과 공모기준 설정 시 지원 대상이 되는 '대형 호텔'의 구체적인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용자 심사 기준에 결합하는 등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면밀한 사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¹⁾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0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5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5,521	95,277	95,277	255,753	160,476	168.4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노후 체육시설 지원(30%),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7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70%) 등 지자체에 정률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2027년 계획안에는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체육시설 298개소, 긴급·안전관련 시설 124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35개소 등 총 457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액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027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55,753백만원 〉 - 160,476백만원 증액	
가. 노후 체육시설 지원 122,796백만원	
· (일반) 208개소 × 1,156백만원 × 30% = 72,385백만원	
· (그늘막 설치) 72개소 × 1,207백만원 × 30% = 26,071백만원	
· (프로스포츠클리닉 개선) 14개소 × 3,190백만원 × 30% = 13,300백만원	
· (월드컵경기장 개선) 4개소 × 23,000백만원 × 30% × 40% = 11,040백만원	
나.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103,704백만원	
· (일반) 120개소 × 1,156백만원 × 70% = 97,104백만원	
· (노후 육상경기장 리모델링) 2개소 × 300백만원 + 2개소 × 3,000백만원 = 6,600백만원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9,253백만원	
· (일반) 35개소 × 1,194백만원 × 70% = 29,253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연례적 실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실행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계획액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률은 매년 하락하여 2025년 기준 58.3%에 불과하였고, 당초 계획액의 50.9%에 달하는 335억 800만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최근 4년간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당초	수정								
2023	63,961	63,961	63,915	63,915	37,273	101,188	79,981	17,936	3,317	79.0
2024	65,853	65,853	65,795	65,795	17,936	83,731	56,150	24,973	2,609	67.1
2025	65,853	65,853	65,521	65,521	24,972	90,493	52,717	33,508	4,267	58.3
2026.8.	95,277	95,277	68,648	68,648	33,508	102,156	55,771	-	-	5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실적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공사 규모 증가²⁾에 따른 사업 소요기간 증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자재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확보 필요, 설계 변경사항 발생 및 민원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실적행률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04억 7,600만원(168.4%) 증가한 2,557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문체부는 긴급안전부문 보조율을 확대(50→70%)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한편, 노후 육상경기장, 프로스포츠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및 야외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워크숍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모 평가 시 사업추진 준비성 등을 평가항목에 넣는 등 실적행률 제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확보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설계 변경 등 현장의 장애 요인이 산재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국비 증액은 사업 집행의 지연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집행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획액만 2.6배 이상 투입된다면 증액된 계획액 역시 대규모 이월 및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별 사업 단위의 공정 단계와 지자체의 실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계획액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엄밀하고 현실적인 재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개소당 공사비(국비): ('23) 246백만원 → ('24) 395백만원 → ('25) 448백만원 → ('26) 491백만원

따라서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과 노후 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동 사업의 정책적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순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계획안을 편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및 행정절차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행행위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하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행 실적 저조한 상황에서 2027년 계획안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주 여건 유지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지원 확대 및 맞춤형 관리가 요구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한다.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간 체육 시설의 자생적 운영이 제한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생활은 공공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초 정주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0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해당 증액분의 배분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 우선순위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개보수 대상 개소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재된 노후 시설 비율이 높으므로, 단순 인구수 기준의 예산 배분보다는 기존 노후 시설 규모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모 심사 및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분포한 전남(15.4%), 충북(20.9%), 경남(50.0%) 등의 교부액 대비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의 저조한 실행행위는 행정적 지연 요인 외에도,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한 지방비 매칭 확보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지자체명	지원 개소 수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노후 시설	안전·긴급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합계			
서울	4	4	5	13	1,852	1,782	96.2
부산	4	7	2	13	3,704	2,910	78.6
대구	8	2	3	13	7,630	4,535	59.4
인천	0	3	0	3	3,426	788	23.0
광주	4	1	1	6	4,696	4,525	96.4
대전	1	5	2	8	1,824	1,656	90.8
울산	10	3	2	15	4,194	1,935	46.1
경기	6	8	1	15	6,776	3,765	55.6
강원	7	2	0	9	3,099	2,108	68.0
충북	5	3	1	9	5,267	1,102	20.9
충남	2	4	1	7	3,199	2,175	68.0
전북	4	5	0	9	4,870	4,226	86.8
전남	7	2	2	11	5,424	840	15.4
경북	3	5	0	8	16,019	9,168	57.2
경남	20	11	6	37	12,390	6,149	50.0
제주	3	6	8	17	6,122	5,053	82.5
합계	88	71	34	193	90,492	52,717	5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선정 비율을 상향하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 추진 여건이 불리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하거나, 설계 및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원활한 공사 착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202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적 재원 배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뒷받침될 때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유산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72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0억원(12.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5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 156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8,515	53,129	53,129	56,386	3,257	6.1
- 일반회계	47,725	52,949	52,949	55,296	2,347	4.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90	180	180	1,090	910	505.6
기 금	13,641	10,866	10,866	15,579	4,713	43.4
- 국가유산보호기금	13,641	10,866	10,866	15,579	4,713	43.4
합 계	62,156	63,995	63,995	71,965	7,970	12.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6,64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59억원(11.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4,19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0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 1,822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235,883	1,330,016	1,331,446	1,482,320	150,874	11.3
- 일반회계	1,206,354	1,285,507	1,286,937	1,419,274	132,337	10.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529	44,509	44,509	63,046	18,537	41.6
기 금	142,614	167,116	167,116	182,181	15,065	9.0
- 국가유산보호기금	142,614	167,116	167,116	182,181	15,065	9.0
합 계	1,378,497	1,497,132	1,498,562	1,664,501	165,939	11.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유산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56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3억원(6.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억원이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7,725	52,949	52,949	55,296	2,347	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90	180	180	1,090	910	505.6
합 계	48,515	53,129	53,129	56,386	3,257	6.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4,82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09억원(11.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4,19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0억원이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06,354	1,285,507	1,286,937	1,419,274	132,337	1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529	44,509	44,509	63,046	18,537	41.6
합 계	1,235,883	1,330,016	1,331,446	1,482,320	150,874	11.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06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80억원(4.0%)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가유산보호기금	192,622	202,585	202,585	210,605	8,020	4.0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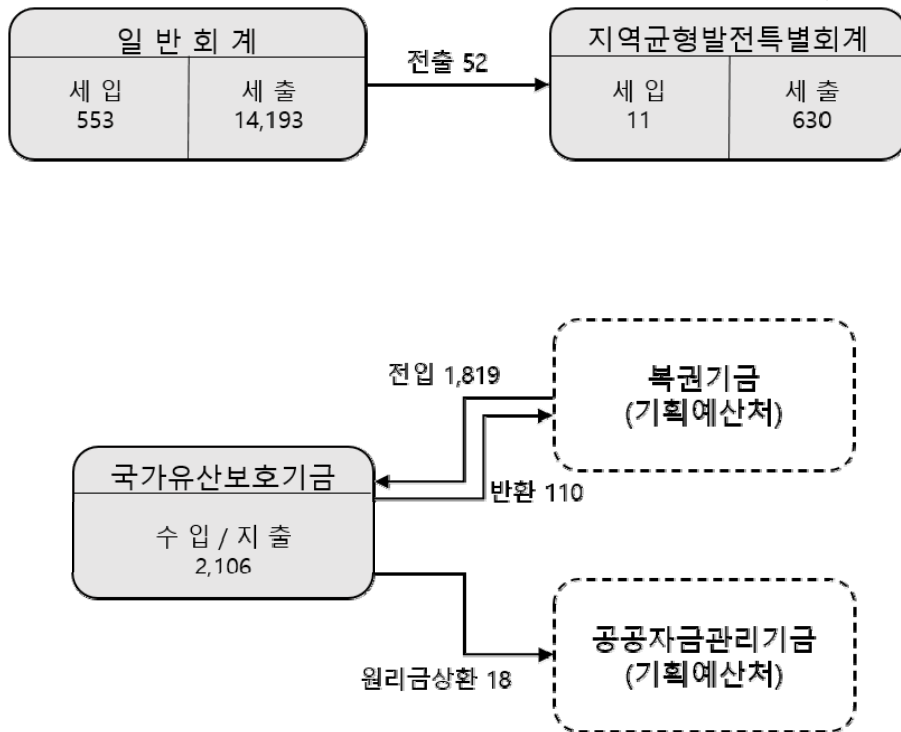
2027년도 예산안의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52억원이 전출된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의 경우 복권기금으로부터 1,819억원을 전입받는 한편, 110억원을 반환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8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유산보수정비 확대 및 디지털 AI 기반 재난 방재 고도화 등을 통해 국가유산의 안전·취약분야 보존을 강화하고, ② ‘국가유산 스테이’ 등 지역 체류형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 중심의 국가유산 향유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③ K-고궁 브랜드화, 베트남 수중 유산 교류협력, 한·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 등의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글로벌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전년도에 선정하고 있고 일부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세부 사업내용을 미리 예측·확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 취지를 고려하여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동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일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및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은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대상별 객관적인 수요 예측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환류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고, 통합예약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공공 및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1개 사업, 24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사업은 국가유산 기반의 숙박시설 조성 및 명소 육성으로 체류형 국가유산 활용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운영·건립’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 지원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운영·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무형유산보호기반구축(자율)’, ‘무형유산보호기반구축(제주)’ 및 ‘무형유산보호기반구축(세종)’ 사업은 지역 무형유산 전승 거점 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관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인 ‘불교문화유산 AX 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은 국가 지정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X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7개)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7,100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운영·건립	1,463
	국가유산수리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1,800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정보화)	3,000
	피지컬 AI 로봇 기반 국가유산 지능형 방재체계 구축	1,000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3,282
	해양유산 국제협력 및 거점지역 활성화	1,3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무형유산보호기반구축(자율)	4,872
	무형유산보호기반구축(제주)	250
	무형유산보호기반구축(세종)	28
국가유산보호기금 (1개)	불교문화유산 AX 플랫폼 구축(정보화)	264
합 계		24,371

자료: 국가유산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공능방재시스템구축 등이 있다.

①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수행, 대국민 관람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인프라 건립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②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공사 완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③ 공능방재시스템구축 사업은 공능유적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방재인력을 증원하고, AI 기반 CCTV 등 방재 인프라를 고도화하였다.

[국가유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개)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보존 기술개발(R&D)	4,420	4,420	10,341	5,921	133.9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499,462	499,462	520,106	20,644	4.1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71,631	71,631	170,913	99,282	138.6
	명승·전통조경 보존관리	3,280	3,280	4,315	1,035	31.6
	무형유산원운영	16,387	16,387	28,972	12,585	76.8
	역사문화센터 건립운영	3,232	3,232	12,669	9,437	292.0
	국립고궁박물관운영	16,142	16,142	24,151	8,009	49.6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운영	2,563	2,563	5,387	2,824	110.2
	경복궁종합정비	5,576	5,576	8,640	3,064	54.9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 및성과관리	513	513	672	159	31.0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19,283	19,283	26,392	7,109	36.9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1개)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 립	3,000	3,000	7,207	4,207	140.2
국가유산 보호기금 (1개)	공능방재시스템구축	18,970	18,970	26,538	7,568	39.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의 분리편성 필요

가. 현 황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 사업¹⁾은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등록) 유산을 보수·정비하고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06억 4,400만원 증액한 5,20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	529,948	499,462	499,462	520,106	20,644	4.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에 대한 보수정비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가유산의 수리 및 원형복원, 국가유산 구역 내 발굴조사 및 기록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국가유산 안내·관람편의시설 정비, 경관 불량시설물 철거·정비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유산 50%, 기존 전시관 보수 30%의 비율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233-701

한편,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유산 보수정비의 사전 예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세부내역 없이 총액 규모로만 예산을 계상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규정되어 2027년 예산안에도 총액으로 편성되었다.²⁾

나. 분석의견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전년도에 선정하고 있고 일부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세부 사업내용을 미리 예측·확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 취지를 고려하여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동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 사업은 국가유산보수정비(일반) 사업과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된다.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유산보수정비(일반) 사업은 3,841억 600만원,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사업은 1,360억원 등 총 5,20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도 예산	2027년도 예산안
○ 총 예산 499,462	○ 총 예산 520,106
가. 국가유산보수정비(일반) 280,976	가. 국가유산보수정비(일반) 384,106
나.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218,486	나.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136,000

자료: 국가유산청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은 총액으로만 예산안에 계상·편성된 사업이다. 총액계상 사업은 국가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지만, 국회에서 세부 내용을 심사할 수 없어 잘못 편성되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³⁾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만 세부내역 없이 총액 규모로만 예산 계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절차와 내역사업의 예측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면 총액계상사업으로서의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전년 4월까지 국가유산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하면 전년 8월까지 국가유산청은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영된 사업을 전년 9월 15일까지 지자체에 사전 통지하며, 10월경에 풍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추가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시행할 최종 대상사업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는 확정된 대상사업의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3)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6.5, 기획예산처), p.148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전년도 각 지자체로부터 국가유산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아 국가유산청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당해연도에 시행할 사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내역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여 세부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지구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⁵⁾에 따라 보존관리 기본계획(2017~2038년)과 시행계획(2018~2038년)이 수립되어 세부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24개소에 2025년 640억

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 및 추진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4.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 2026년 248억 5,400만원, 2027년에도 15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지구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⁶⁾ 및 시행령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정비계획(2026~2030년) 및 시행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국가유산 14개소에 2025년 230억원, 2026년 491억 9,100만원, 2027년 180억원이 편성되었다.

풍납동 토성 유적지구의 경우에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으므로 세부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나, 국가유산 1개소에 2025년 1,082억원, 2026년 1,444억 4,100만원, 2027년에는 94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 유적지구별 보존관리/복원·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현황]

연도별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백제왕도 핵심유적지구	공주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2017~2038)	공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2018~2038)
	부여군		부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2018~2038)
	익산시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2018~2038)
신라왕경 핵심유적지구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정비계획(2026~2030)	2026년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계획('26.5)
풍납동 토성 유적지구	서울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2023~2027)	2026년 풍납토성 보존·관리사업 시행계획(2026.2)

자료: 국가유산청

[최근 3년간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내역사업 각 지구별 예산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국가유산수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백제왕도	24	64,000	24,854	15,970
신라왕경	14	23,000	49,191	18,000
풍납동 토성	1	108,200	144,441	94,602
계	39	195,200	218,486	128,572 ¹⁾

주: 1) '27년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정부 예산은 136,000백만원이나, 상기 금액은 지방비 확보 등을 위해 사전통지된 금액

자료: 국가유산청

이를 종합하면 국가유산청은 전년도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수정비 필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사전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고, 일부 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도 국가유산 복원정비를 위한 각종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등 총액계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동 사업 중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의 경우 유적별 세부 이행과제가 수립되어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어 총액계상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⁷⁾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재정법」상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총액 계상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세부사업에서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III」 (2025.9, 기획재정부), pp. 2,785~2,792.

가. 현 황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¹⁾은 국가지정(등록)유산의 법적 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992억 8,200만원 증액한 1,7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	71,631	71,631	170,913	99,282	138.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 사업 내에서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의 추정이 가능한 사업을 비총액사업으로 2026년부터 분리 편성하였으며, 2027년부터 토지 등 매입관련 사업 예산 792억 12만원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으로부터 이관하였다.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구조개편]

구분	2025년		2026년(개편 후)		
세부사업명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		국가유산 보존기반구축 (비총액)
내역사업명	국가유산보수 정비(일반)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가유산보수 정비(일반)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예산액	3,347억원	1,952억원	2,810억원	2,185억원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은 국가유산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 시행, 대국민 관람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 보조(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유산 50%, 기존 전시관 개보수 30%) 방식으로 지원된다.

주요 사업유형으로는 수장(보호)시설 건립, 유지관리시설 건립, 관람편의시설 건립, 가치증진시설 건립,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유형이 있다.

[주요 사업유형]

구분	사업 유형
수장(보호)시설 건립	국가유산에 해당되는 동산 및 독립된 조형물에 대한 수장 및 보호시설 건립 비용 지원 → 수장고, 보호각, 천연기념물 보호센터 등
유지관리시설 건립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수행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프라 구축 → 관리소, 유지관리시설 등
관람편의시설 건립	관람편의시설 확충이 미흡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환경 여건 개선 → 화장실,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가치증진시설 건립	국가유산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확충하여 국가유산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 → 국가유산 관련 시설 증개축, 복구 등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효과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토지 등을 매입 → 토지 및 유산 매입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일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및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수장(보호)시설 건립 등 132개소의 사업비 917억 1,288만원과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토지 등 매입 114개소의 사업비 792억 12만원을 합하여 1,7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세부 편성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70,913,000천원	
가.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91,712,881천원)	
· 수장(보호)시설 건립 22건 × 1,224,400천원 = 26,936,797천원	
· 유지관리시설 건립 52건 × 631,449천원 = 32,835,320천원	
· 관람편의시설 건립 46건 × 504,876천원 = 23,224,310천원	
· 가치증진시설 건립 12건 × 726,371천원 = 8,716,454천원	
나.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79,200,119천원)	
· 694,737,885원 × 114건 ≒ 79,200,119천원	

자료: 국가유산청

그런데 2026년 사업 시작 후 실집행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6년 8월 말 현재 사업예산 716억 3,1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교부현액 중 지자체는 208억 3,200만원만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6. 8.	71,631	71,631	71,631	-	71,631	20,832	-	-	29.1

자료: 국가유산청

2026년 8월 기준 각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예산 교부 이후 집행액이 전무한 실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1.0%), 충청북도(8.4%), 충청남도(10.1%), 강원특별자치도(13.3%), 경상북도(14.0%) 등 다수의 지자체가 극히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이 배정된 13개 지자체 중 실집행률이 50%를 초과한 곳은 대구광역시(53.1%)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는 동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2026년 지자체별 실집행현황 및 2027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2027년 예산안 ¹⁾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특별시	385	-	385	-	-	-	-	8,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7,573	-	17,573	6,751	-	-	38.4	18,682
부산광역시	1,449	-	1,449	550	-	-	37.9	3,049
대구광역시	395	-	395	210	-	-	53.1	3,595
대전광역시	50	-	50	-	-	-	-	-
인천광역시	-	-	-	-	-	-	-	665
경기도	3,977	-	3,977	1,801	-	-	45.3	2,885
강원특별자치도	4,667	-	4,667	622	-	-	13.3	6,343
충청북도	841	-	841	71	-	-	8.4	569
충청남도	5,806	-	5,806	587	-	-	10.1	11,877
전북특별자치도	8,158	-	8,158	3,921	-	-	48.1	7,727
경상북도	18,718	-	18,718	2,625	-	-	14.0	21,203
경상남도	9,412	-	9,412	3,693	-	-	39.2	6,944
제주특별자치도	200	-	200	2	-	-	1.0	-
계	71,631	-	71,631	20,832	-	-	29.1	91,713

주: 1) 2027년 신규 내역사업인 보존자산(유산) 확보지원 사업은 상기 표 2027년 예산안 내용에 미포함
자료: 국가유산청

2026년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성금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사업지의 경우에는 지방비 미확보,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지연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도 실집행 부진 사업 추진현황]

지자체	국가유산명	사업명	주요 사업추진경과
서울	서울 문묘와 성균관	화장실 신축	발주 준비 중(설계변경 추진)
부산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종무소 증축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	국가유산명	사업명	주요 사업추진경과
부산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	수장고 건립	설계변경 진행 중(설계변경 승인 후 사업 진행 예정)
강원	동해 무릉계곡	관리시설 건립	실시설계 완료(26.09.30.) 및 국가유산청(명승과) 설계승인 협의 중
충북	청주 상당산성	화장실 증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선행절차 완료 후 사업 추진 예정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	수장고 증축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보완 등으로 심의 기간 소요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달 계약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발주 지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26.10.31. 완료 예정)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26.12월)
충남	도가논변모자리 혹론 목판	장경각 및 관리동 건립(2차)	2025년 11월 착수 후 공사 진행 중으로 2027년 5월 사업 완료 예정
충남	아산 외암마을	관람객 휴게시설 건립	사업대상 위치가 외암리 86에서 외암리 97로 변경됨에 따라 재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6년 10월 설계완료 후 12월 공사 착수 예정
전북	금당사 괘불탱	공양간 건립(2차)	담장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중
전북	금당사 괘불탱	관리시설 건립	건축 인허가로 인한 공사중지, 완료 후 공사 재개 예정
전남	강진 백련사 사적비	육화당 및 공양간 개축(2차)	설계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 8월 기성금 지급 및 10월 말 준공금 지급
전남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수장고 건립(2차)	공사 진행 중, 군비 미반영으로 추경 반영 예정
전남	지리산 화엄사 일원	청계암 요사채 증개축 설계	국회증액사업으로 지방비 추경 후 9월부터 추진 예정
전남	순천 낙안읍성	관리동 및 사무동 신축	공용건축물 협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
전남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	강당 개축	건축인허가 진행 중, 완료 후 공사 착수 예정
전남	완도 청해진 유적	목교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순군비) 진행중, 설계 완료 후 11월 공사계약 예정(기반구축사업 예산)

지자체	국가유산명	사업명	주요 사업추진경과
경북	경주 남산 일원	관리소 등 건립(1차)	당초 실시설계 사업기간이 '25.5.~'26.6.이었으며, 관리소 지하시설 아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설계 보완 요청으로 지연. 보완 후 '26.12. 착공 예정
경북	경주 금척리 고분군	유구 보호시설 건립 설계	대형 고분의 조사 기간 지연 및 방법론 변경으로 인해 당해 보호시설 설계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예정
경북	경주 진평왕릉	화장실 건립	화장실 및 주변정비(담장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설계 검토로 사업 지연. 추가 시설 없이 12월 착공 예정
경북	문경 봉암사 극락전	화장실 개축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인허가 행정절차(산림청) 진행 중)
경북	영천 봉림사 영산화상도 및 복장유물	화장실 증축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연되었으나, '26년 10월 착공 후 추진 중
경북	울진 성류굴	탐방안내센터 건립(1차) 피암터널추가및 보강공사(1차)	낙석에 따른 관람 안전조치 선행 등 설계용역 진행 중
경북	청송 보광사 극락전	요사채 재축	보조금 교부 절차 이행 중
경북	포항 오여사 동종	화장실 증축	건축인허가 지연
경남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공양간 건립	설계 승인 진행 중
경남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 존상 및 시왕상 일괄	종무소 건립 설계	2026년 1회 추경 시 시비 확보 후 예산 집행[추경 예산 요구 완료('26.6.30.)]
경남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수장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사업 특수성에 따른 사업자 계약 체결 지연
제주	제주 서귀포 산방산	기존 화장실 철거 및 신축	단년도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BF예비 인증, 건축협의 이행기간 소요 -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 '26. 6~9월 - 공사 추진: '26. 10월 ~ 12월

자료: 국가유산청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132개소의 사업비와 114개소의 토지매입비를 합하여 전년 대비 992억 8,200만원(138.6%) 증액한 1,709억 1,300만원을 편성²⁾하였다.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28건 중 19건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한 9건에 대해서도 연내 실제 집행가능 소요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범위에서 계상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예산 집행 부진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 예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정착할 필요가 있다.

2) 토지매입사업인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사업 792억원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202억 8,200만원 증액된 917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 예산 편성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등 사업 개선 필요

가. 현 황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¹⁾은 민간 부문의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것으로,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8억 300만원 증액한 60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60,609	62,126	62,126	64,599	2,473	4.0
문화유산 관람지원	56,888	58,473	58,473	60,276	1,803	3.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²⁾(이하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의 감면비용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부터 신규로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의 내역사업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법령 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점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받았으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합리적인 관람료 지원 산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부문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가 국가지정유산을 공개하면서 징수하던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을 위하여 65개소 사찰을 대상으로 총 60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편성내역
<p>〈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총예산 60,2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65개소 12개월분 55,025 • 관람환경 개선비 지원 × 9% = 4,952 • 보조금 회계검증 수수료 99 • 사업운영 경상경비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람 지원 모니터링 용역 1식 × 150백만원 = 150 - 사업운영 경상경비 (수용비, 여비) 50 · 자문회의, 실무협의 진행경비(일반수용비) 20회 × 1,750천원 = 35 · 실태조사 및 집행점검 (국내여비) 50회 × 100천원 × 3명 = 15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은 문화유산법 제49조제4항을 근거로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및 국가유산청 고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최근 3년간 관람객 수 및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이에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집행지침」에서도 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 및 관람객 수’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 사업 예산으로 관람료 감면비용 이외에 계수기 설치비용도 추가로 지원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등이 관람료 감면 이후에도 방문 계수기를 통해 관람객 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유산청은 매년 동 사업 지원대상기관으로부터 연도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를 제출받고 있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개요]

구분	주요 규정내용
지원대상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
지원조건	국가지정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을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원내용	관람료 수입 감면비용, 관람환경개선 시설관리유지비
지원금 산정기준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 및 관람객 수 (무료관람객 감면실적 제외) - 관람료: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없을 경우 징수 최종 3개년 - 관람객: 최근 3년간 관람객 현황, 없을 경우 징수 최종 3개년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이전의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

자료: 「2026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집행지침」에서 발췌

[최근 3년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지원사찰 및 이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수, 명)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감면료 지원 사찰수	총 이용자수
2024	55,242	55,221	64	41,652,941
2025	56,689	56,689	65	44,286,516
2026.8.	58,273	33,980	65	28,240,187

자료: 국가유산청

하지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예산안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제출받은 관람객 수를 근거로 예산안을 산출하는 대신 2022년도 입장료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직전 5년간 물가상승률만을 곱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안 산출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안 편성기준	예산안 ²⁾
2023	2022년 관람료 수입액 × 직전 5개년 물가상승률(2%) × 8개월분(75.5%) ¹⁾	37,450
2024	2023년 1년 기준 예산액 × 직전 5개년 물가상승률(2%)	50,595
2025	2024년 예산액 × 직전 5개년 물가상승률(2.4%)	51,918
2026	2025년 예산액 × 직전 5개년 물가상승률(2.8%)	53,371
2027	2026년 예산액 × 직전 5개년 물가상승률(3.1%)	55,025

주1) 75.5%는 2022년 월별 관람료 수입 중 8개월(5월~12월) 징수액이 2022년 총 관람료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2) 예산안 통계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관람환경 개선비 제외)

자료: 국가유산청

이 같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각 사찰별 무인계수기로 측정하고 있는 관람객 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찰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2022년도 관람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산출방식은 관람객 수 등의 증빙을 통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2022년 입장료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사업 관련 국회 결산심사 현황]

구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사업은 2022년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예산을 편성, 교부하고 있어 실제 관람료 감면비용과 지원금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면비용 지원금 외에 지급 중인 관람환경 개선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감면비용 지원금과 집행항목이 중복되며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보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방식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관람환경 개선비의 지급여부 및 효율 등을 재검토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사찰별 관람객 수를 매년 계수기로 제출받고 있음에도 이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타당성도 약화될 수 있으며, 모든 사찰이 2022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2022년 이후 사찰환경 변화 등으로 관람객이 늘어난 사찰과 줄어든 사찰과의 지원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람료 지원 산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 예산편성 방식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¹⁾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향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소비 확대 및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신규로 61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	-	-	7,100	7,100	순증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	-	-	6,100	6,1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은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 또는 공공위탁하고 있는 고택·근현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 10개소의 고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2031년에는 1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2027년 예산안에는 숙박 기반시설 구축, 콘텐츠 개발·운영, 브랜드 개발 및 통합예약플랫폼 구축 등에 61억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대상	(구조) 국가·시도지정 고택·근현대건축물 중 독채형 구조, (소유) 지자체 소유관리 또는 공공 위탁 대상 중 우선 추진
핵심타깃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 및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내국인
사업내용	국가유산 기반 거점형 숙박 인프라 조성·운영 및 체류콘텐츠 개발 - (인프라 조성) 고택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기본·편의시설 설치 등 * 고택·주변시설 활용한 숙박 공간, 화장실·샤워실, 컨시어지, 카페·다 이닝룸, 체험 공간 등 조성 * 시·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지원 불가 - (콘텐츠 개발·운영) 지역미식·전통예술·공예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수용 태세 강화, 주변 볼거리와 연계한 여행패키지 등 개발·운영 - (브랜드 개발) 통합 브랜드명 및 BI 개발, 공통 적용 운영기준 및 서비 스·안전·위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 - (통합운영지원) 브랜드 관리 및 인증, 서비스 기준 및 품질 관리, 마케팅, 통합 예약 플랫폼 구축 등(민간위탁)
사업대상 선정방법	지자체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자료: 국가유산청

[2027년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기반시설 구축) 리모델링 및 숙박 기본시설 설치 등 인프라 조성 4,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보조/자본) 10개소×820백만원×50%(보조율)=4,100 ○ (콘텐츠 개발·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보조/경상) 10개소×200백만원×50%(보조율)=1,000 ○ (브랜드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연구) 브랜드·BI 개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용역) 1식×100백만원=100 - 서비스표준화·운영가이드라인 마련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용역) 1식×200백만원=200 ○ (통합운영지원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관리·인증 및 마케팅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1식×300백만원=300 - 통합예약플랫폼 구축 및 운영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1식×400백만원=400
--

자료: 국가유산청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실질적인 수요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대상별 객관적인 수요 예측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환류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는 브랜드·플랫폼·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위탁기관인 통합운영지원기관이 현장을 지원하며, 실제 운영은 전문 운영자와 지역 운영조직이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지자체는 대상 고택을 발굴·제공하고, 인허가 협의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선정한 전문 운영자 또는 지역기반 운영조직인 현장 운영주체는 객실운영, 고객대응 및 안전·위생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역 주민 및 공동체는 식음, 체험, 해설 등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스테이 10개소(총 34실)가 시설조성 후 정상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한 연간 수익구조 검토에서, 연평균 점유율 60%를 적용하여 연간 객실 판매량을 7,446실로 설정하고 객실 단가 40만 원, 약 29.8억원의 연간 총 운영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12억원, 시설관리비 3억원 등 연간 총 20억원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개소당 약 1억원(총 10억원)의 운영수익을 산출하였다.

[국가유산 스테이 예상 수익구조]

연간 객실 판매량	연간 객실매출	연간 운영비	연간 운영수익
객실수 10개소 34실	객실 판매량 × 객실단가	인건비 12억원 (10개소×3명× 4,000만원)	총 운영수입 (객실매출) 30억원 - 운영비 20억원
연간 운영일 365일	7,446실×40만원	시설관리비 3억원 (10개소×3,000만원)	
점유율 60%	※식음·체험비용 포함	공공요금 2억원 (10개소×2,000만원)	
34실×365일×60% =7,446실	29.8억원 (약 30억원)	세탁·소모품 2억 (7,446실× 약27,000원)	
		보험·안전관리 1억 (10개소×1,000만원)	
		20억	연간 운영수익 =약 10억원 (개소당 1억원)

주: 1. 국가 및 지자체 소유 고택 중 현장조사 샘플링(18개소)을 통해 추정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국가유산 유지관리와 서비스 개선 및 지역 상생 등에 재투자하는 수익환류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고택 등 국가유산의 지리적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특성을 고려할 때, 1박당 40만원 상당의 가격 정책과 사업 초기 60%의 연평균 점유율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가 목표치에 미달하여 수익환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대상별 실질적·객관적 수요예측에 기반한 운영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유산 스테이 사업의 실질적 수요창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통합예약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공공 및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통합운영지원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사업비 7억 원 중 4억 원이 '통합예약플랫폼 구축 및 운영'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2027년 10개소를 우선 조성하여 국가·지자체 소유 및 공공 위탁 고택을 중심으로 운영모델 및 체계를 검증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영 대상이 총 34객실 수준으로 한정적인 시범사업 단계에서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독자적인 예약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플랫폼 구축은 초기 개발비 외에도 향후 마케팅, 서버 유지보수, 보안 관리, 결제 시스템 운영 등에 지속적인 경상비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업 초기의 인지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합예약플랫폼 구축과 함께 기구축된 공공 관광 플랫폼 및 민간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유산 스테이 사업은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유산과 숙박·체험 기능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스테이 사업은 국가유산의 보존 뿐만 아니라, 숙박·체험을 통한 국가유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까지도 그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 수요 분석, 숙박 인프라 연계,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전문성과 함께 관광 분야의 전문성 확보 또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 수요 분석, 국내외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기획 등 관광 전문영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광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대상 고택의 리모델링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기적인 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등 보존·관리와 함께 국가유산에 적합한 활용·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조성부터 숙박·체험 운영까지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관광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